

2011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

**Can the G-20 Save Globalization
and Multilateralism?**

Danny Leipziger

**Markets, Economic Change, and
Political Stability in North Korea**

Marcus Noland



Danny Leipziger

현 미국 George Washington대 교수, 전 세계은행 부총재.

오랫동안 세계은행에 재직하면서 동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발전의 관하여 많은 연구를 하였고 특히 2004~2009년 동안 부총재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세계적 빈곤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음. 그리고 2009년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Michael Spence 교수와 공동으로 “*Globalization and Growth: Implications for a Post-Crisis World*” 라는 역작을 출간한 바 있음.

“*Lessons from East Asia*”, “*Preventing Banking Crisis*”, “*Korea: Transition to Maturity*” 등 주요 논문 및 저서 다수.

Marcus Noland

현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부소장 겸 선임연구위원.

Swarthmore大 卒, Johns Hopkins大 경제학 박사

미국 대통령비서실 경제자문위원회 선임연구위원 역임. Johns Hopkins大, 東京大교수, 다수의 경제저널지 편집자로도 활동 중.

“*Witness to Transition: Refugee Insights to North Korea*”, “*Korea after Kim Jong-il*”, “*No More Bashing: Building a New Japan-U.S. Economic Relationship*”, “*Avoiding the Apocalypse: The Future of the Two Koreas*”, “*Global Economic Effects of the Asian Currency Devaluation*” 등 저서 및 논문 다수.

2011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

**Can the G-20 Save Globalization
and Multilateralism?**

Danny Leipziger

**Markets, Economic Change, and
Political Stability in North Korea**

Marcus Noland

머리말

전후 세계경제가 역사에 유례없던 번영을 누리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GATT/WTO 체제하에서 뿌리를 내린 다자주의 원칙과 세계화의 확산에 기인하는 바 크다. 한국이 선진국 말단에 진입한 것도, 중국이 중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도 모두 이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바로 이 세계화와 다자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또는 도하라운드)는 벌써 10년째 표류하고 있으며 각종 지역주의가 난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현재 기로에 서있는 다자주의와 세계화는 앞으로 어떤 운명을 겪게 될까? 과연 G-2, G-7 또는 G-20은 이를 구원해낼 수 있을까?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으로서는 지극히 중요한 관심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더하여 한국경제는 여타국가에서와는 달리, 또 하나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북한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2010년) 3월에 있었던 천안함 폭침사건, 그리고 11월의 연평도 포격사건은 모두 한국이 현재 지고 있는 위험과 부담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라 하겠다. 그 동안 핵문제라는 고도의 정치적 이슈에 휘말려 온 우리는 북한 사회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소홀했던 점이 없지 않았다. 물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철저하게 차단되었던 것도 이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런데 최근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난민 또는 탈북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북한사회의 변화현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중요한 창구가 열리게 되어 간접적인 연구가 가능해졌다. 북한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임에 틀림없다.

이 보고서는 바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1년도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에 특별히 초청된 두 분의 경제학자 강연내용을 그 질의·응답과 함께 정리한 것을 담고 있다. 하나는 지난 5월 24일 미국 George Washington 대학의 Danny Leipziger 교수(前 세계은행 부총재)가 “Can the G-20 Save Globalization and Multilateralism?” 이란 제목으로 강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6월 29일 미국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PIIE)에서 부원장으로 재직 중에 있는 Marcus Noland 박사가 “Markets, Economic Changes and Political Stability in North Korea”란 제목으로 강연한 것이다.

두 강연자 모두 우리에게서 너무나 잘 알려진 분들이라서 간략하게 소개 하면, 우선 Leipziger 교수는 거의 평생을 세계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경제발전분야와 관련된 많은 연구를 하였는데, 특히 2004~2009년 부총재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700여 명의 경제학자들을 동원하여 빈곤퇴치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책임자로 일한 바 있다. 작년(2010년)에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Michael Spence 교수와 함께 “Globalization and Growth”라는 책을 발간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Ascent after Decline: Challenges of Growth in a Post-Crisis World”라는 저서가 출간될 예정으로 있다. 한편, Noland 박사는 지난 30여 년간 그의 연구역량과 열정 대부분을 북한문제에 일관되게 투입해온 매우 희귀한 경제학자이다. 그 동안 북한과 관련된 수 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해오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중국에 있는 북한 난민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한 연구결과를 “Witness to Transformation: Refugee Insights into North Korea”란 책에 담아 출간하였다. 그리고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또 하나의 저서 “Emerging North Korea: The Role of Economic Statecraft”도 올해에 나왔으며, 이번 강연내용도 이 두 저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독자들의 편의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강연자의 강연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Leipziger 교수는 먼저 최근 세계경제의 변화추이를 주요

국의 상황과 함께 살펴본 후 세계화와 다자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한 후, 끝으로 G-20의 역할과 전망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우선 세계경제의 축이 선진국에서 신흥시장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경제위기가 선진국에 의해서 촉발되었지만 그 회복은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시장국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으며, 또 세계무역의 증가도 개도국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음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세계화와 다자주의는 여러 측면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바 그는, 많은 무역협정들이 도하라운드의 범주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 비록 국가 간의 소득격차는 감소하고 있지만 각국 내의 소득분배는 악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초국경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그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는 먼저 표류하고 있는 도하라운드를 합의될 수 있는 수준에서 빨리 매듭짓고 이를 넘어서는 강력한 무역체제에 도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세계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기업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다자적 해결방안의 지지자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도 단기적 투기자본에만 적용하고 일반적 토빈세(Tobin's taxes)의 도입은 자제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 외에도 기후변화와 이민문제, 그리고 조세제도와 부패문제 등 다자적 접근방법을 요구하는 초국경적 이슈들이 많은데 이러한 문제들을 어디서 누가 다룰지를 그는 묻고 있다.

최근 중국은 경제규모가 커져 G-2가 되었다고는 하나 경제규모에 걸맞는 역할을 할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고, G-7을 구성하는 선진국 중 EU국가들은 국가채무 등 내부문제로 불잡혀 있고, 미국은 높은 실업과 소득분배의 악화 이외에도 정치적 문제로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일본도 국가

채무와 인구구조문제 등으로 나설 처지가 못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캐나다, 호주, 한국 및 건전한 신흥경제국을 포함하고 있는 G-20에 희망을 품고 있다. G-20은 아직 잘 조직화되지 않은 하나의 클럽에 불과하며 또 가장 중요한 집행력이 결여되어 있지만, 그래도 2008년 위기 시 국제적 경기부양책과 글로벌 신뢰회복을 이루어내는데 성공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것이 바로 세계화를 지켜줄 유일한 대안임을 그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북한문제 전문가인 Noland 박사는 중국에 있는 북한주민 1,600여 명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밝혀내고 있다. 그는 이를 토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 북한 정책대안들도 제시하고 있으며,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극히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그의 견해를 거침없이 진솔하게 피력하고 있다. 정책관련 담당자들이나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난민들이 북한을 떠난 이유 중에는 경제적 동기가 60%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정치적 이유도 25% 이상을 차지하였다. 지난 1990년대 기근은 북한주민의 심리상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도 직장보다는 시장에서의 장사를 으뜸으로 꼽았고, 출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군인에 대한 선호도는 감소하고 역시 장사가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정책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시장활동의 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심지어 권력자들의 수탈의 발판으로 남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주민들의 외국 대중매체에 대한 접촉이나 소비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정권에 대한 불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나 기구

는 실종된 상태에 있어 북한사회에서 재스민혁명 같은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그는 북한정권을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는데 시장과 정보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북한정권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 경제관계는 인도적 원조에서 시작하여 개발지원 단계를 거쳐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상업적 관계로 발전시켜 시장이 북한내부의 기구로 자리잡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가능한 한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는 먼저 중국의 대 북한정책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중국은 사회주의 동맹국인 북한을 그들의 국경에 완충지대로 두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중국 내에는 사상적으로 북한에 친밀감을 갖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노년층이 있는 반면, 북한의 개인숭배와 권력세습을 비웃는 문화혁명의 피해자인 젊은 층이 있는데 이들은 아직 권력을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의 대 북한정책은 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그는 보고 있다. 그는 또 미국의 현 대북정책인 소위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비록 일부에서는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Obama 대통령은 내년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한국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하였으며, 노무현 정권하에서는 단순히 “포용을 위한 포용(engagement for engagement’s sake)”으로 전략하였고 이것이 이명박 정권의 등장에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믿고 있다.

아무튼 이 보고서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삼성전자(주)의 후원으로 만들어져 많은 정책담당자와 관련 학자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신 이건희 회장님과 최지성 부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포럼을

위해서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인용 부사장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2011년 9월

세계경제연구원
원장 남 종 현

차 례

머리말 3

Can the G-20 Save Globalization and Multilateralism?

기로에 선 세계화와 다자주의, 그리고 G-20 11

Danny Leipziger

번역문 31

Markets, Economic Change, and Political Stability

in North Korea 51

북한의 시장과 경제,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Marcus Noland

번역문 89

Can the G-20 Save Globalization and Multilateralism?*

Danny Leipziger

In the global economy, there has been an ongoing, well-documented, discernable shift in economic power. While the rate of ascent for China's economy over the next 20 or 30 years is not known, the economic events in China for the past 10 years are very well known. It is also clear that other economies — including Korea — have assumed a much larger role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power structure. This has been reinforced by the recent economic collapse and the fact that the recovery has been driven not by advanced economies, but by emerging market economies. In fact, the emerging markets — the new economic powers as I like to call them — provided a cushioning effect to the downside of the crisis. Coming out of the crisis, many of the advanced economies have fiscal problems, creating a fiscal drag, and this does not bode well for the future growth rates of some nations.

Another factor changing on the international landscape is views held on capital flows. The question has been if nations should be as open to capital flows in the future as they have been in the past. Even within the IMF there has been a shift on what nations should do in

* Transcript of a speech given at the "IGE/Samsung Electronics Global Business Forum" on Tuesday, May 24, 2011.

the face of large capital inflows. Trade has also been a changing feature of the international landscape. The irony is that the biggest driver of world trade is south-south trade. Many of the arrangements — whether they be FTAs or others — exist outside of the Doha process. So there is a disconnect between where the large increases in trade is coming from and where the political debate is.

The Growth Commission — which I chaired from 2004-2008 — dealt with the drivers of growth, and the report issued reinforced the messages coming out of East Asia. That is, certain ingredients are needed for growth, but the recipes for individual nations may certainly differ. Now coming out of this recession, the question is whether or not these views are chang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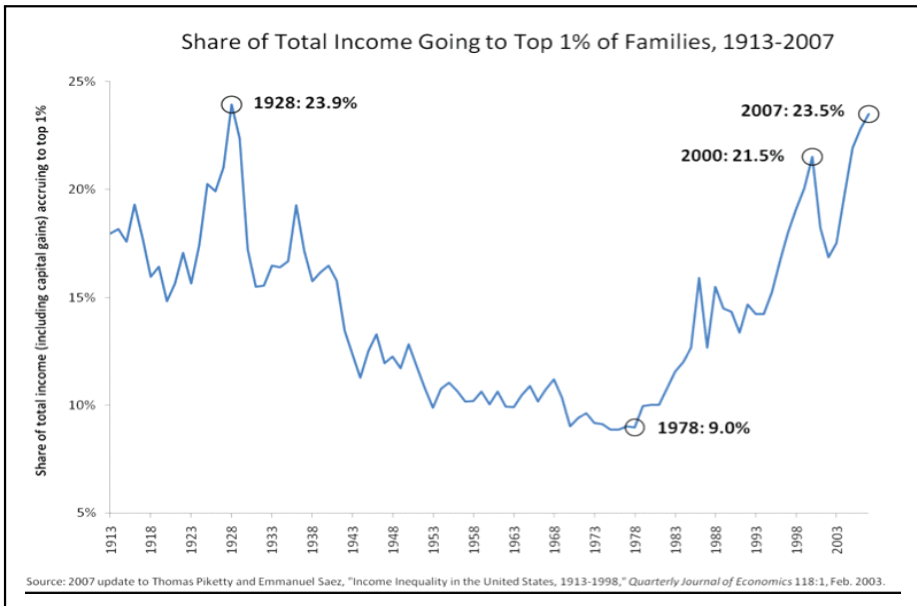
Another hot topic was that of divergence and convergence. While much effort is expended on convergence — which essentially states that as economies mature, growth rates decline — the challenge in the context of multilateralism is that convergence between nations is accompanied by divergence within nations. This unequal distribution of income creates a force that counters multilateralism.

Turning to the United States, the reality is that neither the stimulus nor QE2 was really able to propel the United States out of recession. Instead, it took a change in confidence and, ironically, this necessary change in confidence was triggered by the extension of tax cuts for the wealthy. This is not exactly what one would expect, but neither fiscal nor monetary policy was doing the trick. One reason for the lack of confidence was that the unemployment rate was extremely

high and continues to be so. Two-thirds of households saw their net worth decline between 2007 and 2009, with the middle class being hit the hardest. At the same time — and following up on the point on divergence — the income distribution in the United States has become much more uneven.

President Obama, in his State of the Union, said that the United States needed to focus on infrastructure, education, and innovation. For economists, those are the elements of the production function. I think he was right that the United States has done poorly in terms of education, and there is very high indebtedness — the debt-to-GDP ratio is approaching 100%. At the moment, there is a lot of liquidity in the system which now needs to be reversed. Soaking up this

〈Figure 1〉



liquidity can only drive up interest rates, so the United States will have some difficulty in finding the right combination to restart growth. Also of consequence for multilateralism is the inequality in income distribution in the United States. As shown in Figure 1, in 2007 the top 1% of the population captured 23.5% of national income. That was the worst disparity since 1928. To add some perspective, in 1978 the top 1% captured 9% of national income.

Crossing the Atlantic, it is clear that Europe is paying dearly for over expanding the eurozone, for lax fiscal oversight, and for a fixed exchange rate. Almost all commentators in the media have reached the same conclusion. The current arrangement is very costly for Europe as a whole — and to Greece in particular. For Greece, I think that debt restructuring is the correct answer. First, Europe will have to spend a lot of money, as will the IMF, in trying to deal with imbalances in the southern part of Europe. In the end, these measures are not going to work. In Greece, the fiscal deficit is 10% of GDP, and the fiscal side has to be contracted. There is no other option when monetary policy is determined in Frankfurt, and the exchange rate is fixed. How can Greece possibly grow out of this deficit without policy instruments at their fingertips? The risks presented by diminished confidence in the eurozone are much lower than the risk of continuing to keep countries in a low growth position. One thing that needs to take place is that Germany's surplus needs to decrease. That imbalance is unsustainable.

China and the Other BRIC N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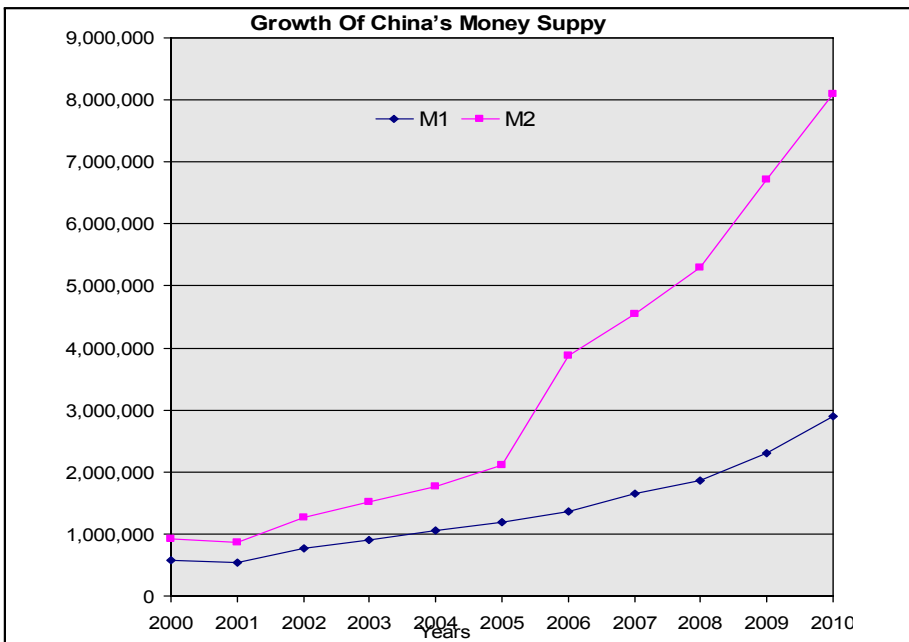
As for China, its growth rates have been remarkable. The question is if the multilateral system is ready to be managed by the G2. I do not think so. It is true that China's economy of \$5 trillion — not on a purchasing power basis but on straight GDP accounting — grows at 10% a year. That is an increase of \$500 billion per year. That increment of growth is larger than the GDPs of at least 120 countries in the world. That being said, there is a certain precociousness to growth. That is, I do not think China is quite ready to exercise all of the responsibilities that come with the size of its economy. Before the recession, there were already a number of factors that were changing the international landscape, but the recession and its aftermath accentuated those factors. There will not be a return to the system as it existed before the crisis. Fundamental changes have occurred — there will be much less reliance on flows of capital, much higher levels of indebtedness, greater stress on trade, and different sources of growth going forward.

While everyone focuses on China's exchange rate, this is only one of the many areas where jobs and exports are being promoted. This is not necessarily a bad policy, but it does have implications for multilateralism. So far, the G-20 has not been able to make policy judgments on unsustainable imbalances and exchange rates and have governments take those seriously.

In the near term, there are serious questions about inflation in China. I do not have an answer to that, but it is instructive to look

at the supply of money — defined as M2 — over the last decade, shown in Figure 2. It has increased eight fold. If growth was 10% a year for a decade, money supply should rise by 100%, but it actually went up by 800%. In this situation, prices have to go up. But up to now, prices have been suppressed and that is now coming to the fore.

〈Figure 2〉



Among the BRIC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razil has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recently, in part because it did not want its exchange rate to appreciate and was willing to take action to prevent it. In the past, there was a debate inside the IMF about nations deterring certain kinds of capital flows. Chile did this in the

1980s via a capital import tax. It was roundly criticized for this, but now Brazil has put successively higher taxes on capital imports in an attempt to keep the currency from appreciating. At the same time it has very high internal debt, which means very high interest rates. Of course, Brazil has a lot of natural resources and is doing well because of commodity prices and China's demand, but there remains a lot of internal debate about the industrial policy of Braz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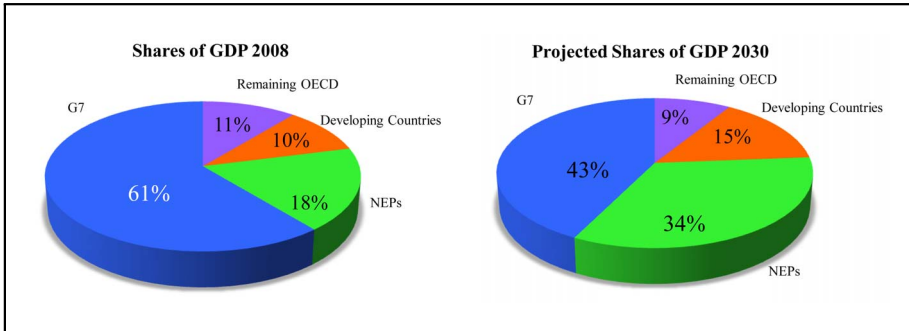
In India, there is a very high fiscal deficit and some real limitations based on poverty, poor governance — at the local level in particular — and internal infrastructure constraints. But it has a huge market. India is up and coming, but no one expects it to take the path of China. South Africa may not belong in the BRICs at all because it has a lot of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It has very high energy intensity, carbon intensity, and very high unemployment. As an economy it is not huge — it is large for Africa, but not a huge global player. Russia resembles a resource rich economy with relatively poor governance. It may not merit being in the elite group of the G-8 based on rule of law and other issues.

The Changing Landscape of Economic Power and Trade

Pictorially, looking at the G-7 today, as compared to what it may look like in 2030 (Figure 3) — taking estimates from the IMF and OECD among others — the G-7 declines in its share of global GDP from 61% to 43%. The new economic powers, in which I include Korea, will be growing dramatically. The question is how to preserve

the important aspects of multilateralism when there is this tectonic shift in economic power?

〈Figure 3〉



There are some major threats to globalization. The trade regime is essentially broken. The good news is that tariffs are relatively low around the world. The bad news is that Doha got stuck on the issues of yesterday rather than the issues of tomorrow. So in a way, Doha has become relatively less important substantively, although it remains very important symbolically. Some people have suggested that the WTO become 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nd that Doha be forgotten because it has been going on for too long.

The difficulty with these rounds is that there was always a battle within governments dealing with trade negotiations contrasting the winners and the losers. There was always enough in the winning column to cover the losses. The trouble is that tariffs are very low now and, trade being fairly free, gains from trade have emerged with or without the Doha round. The additional benefits of Doha are seen

to be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the commitments that nations have to make.

Another threat to globalization is capital flows. While I do believe in strong regulation, I am not a fan of Tobin's taxes because they do not deal with the fundamental problem. Brazil is the case in point — capital import taxes have not fundamentally changed its policy choices.

There are a number of other cross border issues which are important. Some of them have been dealt with in the G-20 but most have not. Most have to do with taxation, corruption, and illegal flows. These cross border issues require multilateral approaches. It is not clear that we have the instruments which are ready to deal with these problems. Then there are the big issues like climate change and migration, for which we do not have any internationally acceptable solutions on the table.

What I want to portray is a system that is changing fundamentally, with a lot of new challenges and threats, and contrasting that with the existing institutions and instruments to deal with these challenges. One institution is the IMF. It has been trusted with a whole host of new responsibilities, including surveillance of imbalances, exchange rates, cross-border risk, etc.

Multilateralism

The IMF has been asked to do a lot of things — secretariat for the

mutual assessment program, doing financial stability assessments for countries who did not request it. These will be done for the major financial market economies. All of this surveillance is good, but so far there has not been much in the way of enforcement coming out of the IMF.

Multilaterally, there needs to be a much stronger commitment to the trade regime, perhaps moving beyond Doha. It may be that the area of negative returns has been reached on Doha, and another mechanism is needed.

There is a new book out by Danny Rodrick on the paradox of democracy and growth in which he addresses his version of the impossible trinity. Normally, the impossible trinity is sovereign monetary policy, fixed exchange rates, and free capital flows, but his version is democracy, national economic policy, and global economic policy. He argues that two of those three can be done together, but not all three. It is definitely true that there is much greater stress on national governments to deliver in terms of employment, in terms of income, in terms of trade protection. There does not seem to be an equally strong commitment on the multilateral side.

In the past, business was a champion of globalization because the gains from trade were there. It is unlikely that we will see trade gain the momentum it had in the 2000-2007 period, in part because that was a very unnatural period in global economic history. It was unnatural because there were tremendous increases in trade, very high growth, very low interest rates, low inflation, and a lot of it w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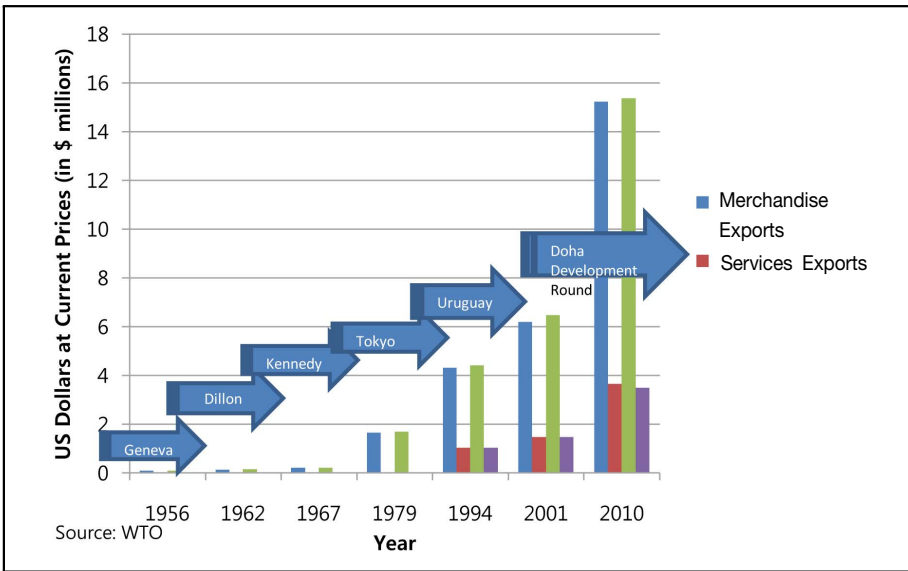
driven by excessive liquidity. But we need to see how we can get business to once again be a proponent of globalization and multilateral solutions. In the United States, the Pew survey is used as an indicator of public opinion. Less than a decade ago more than 75% of the American public thought international trade was a good thing. One year ago, that number was below 50%. People ascribe many of the domestic ills in the United States to globalization. The reality is that there is off shoring, but much of the job and income loss have nothing to do with globalization, but have a lot to do with internal structure. So we need business to be pro-multilateralism.

At the same time, it must be acknowledged that some of the imbalances, particularl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not sustainable. Will the G-20 be more capable than the IMF? For many years the IMF properly diagnosed the problem, but there was no enforcement mechanism. I think it also needs to be understood what is acceptable in terms of industrial policy. No one disputes the important role of government in trying to strategically position an economy. I think the green growth agenda and stimulus package aimed at promoting green growth in Korea was a very smart policy. Countercyclical macro measures were needed, but Korea did not just want to repaint bridges. Instead, it wanted to do something that made strategic sense. Investing in green technology made sense because there was a future export market, and there are significant externalities for which the government would want to help shoulder the burden.

I would contrast that with some other aspects of industrial policy

which are less enlightened and less horizontal in their nature, and much more protectionist. This picture (figure 4) illustrates two things happening with respect to Doha. First, it is taking too long. It has already been a decade, and at some point it has to be considered as finished. Compared to the GATT and WTO rounds it is taking too long. At the same time there is an increase in the exports and imports of services which are not even covered in Doha, which makes Doha irrelevant. It does have a symbolic importance, but if it cannot be salvaged then we need a new initiative on trade.

〈Figure 4〉



Who is able to deal with multilateral problems? The G-7 is one option, but the problem is that a number of the countries are faced with bad policy choices having to do with low growth and high debt. Europe is seemingly consumed with its internal issues, but also has

some demographic concerns which make it less able to deal with the problems on a global scale. The United States has tremendous problems with employment, income distribution, and indebtedness. Japan, even before the recent crisis, has been in a low growth trap for 15 years. Japan's very high internal indebtedness and demographics essentially doom it to continue its low growth outlook. There are some parallels that Korea may want to take note of. The demographic factors that have stymied Japan's growth are beginning to show in Korea. So, to be provocative, I often say Canada is the country to bet on in the G-7. With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it has resources, size, good management, good policy at immigration, and survived the financial crisis well.

The BRICs are an interesting political grouping, but the trouble is that they are so different. There is very little that connects them other than the term 'BRICs.' When these nations do meet, they try to issue a joint statement, which are always very general, lowest common denominator statements.

The G-20 is an interesting grouping of 19 countries plus the EU. It did well in dealing with the stimulus programs and restoring global confidence. I think the G-20 gets good marks for its actions in 2009 and 2010, but, it should be realized that it is still a club — more representative than the G-7 — but still largely uncoordinated. It has no implementation capacity. It has tried to use the IMF for some of the macroeconomic implementations, and I think it could use places like the World Bank to bring about change on climate change. The amount of investing that is necessary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is huge and it will not come from public or private sources. If the capital of the World Bank were doubled, a big dent could be made on these issues. The real verdict on the G-20 has to do with implementation — will it be effective in dealing with problems?

There are issues of imbalances and cross-border regulation. Too-big-too-fail is not the issue, but rather regulatory arbitrage. Will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be able to solve these issues, even without implementation capacity? We are now being managed globally by associations, and the question is who will actually do the analysis and implementing. The IMF could do much of it, but it has not yet established itself in some parts of the world as a reliable partner.

What are needed are smart, supranational solutions that give us better options. At the moment the EU is inwardly focused, the United States' political problems limit what it can do, and China has yet to step up to the plate. But to be fair to China, when it enters the OECD it will do so at levels of per capita income much lower than other nations.

The Role of the G-20

Korea has received extremely high marks for its role in the G-20. It cannot be blamed for the results because much of what happened at the summit related to politics at home. Obviously, the QE2

announcement a month before the summit was not very helpful in trying to deal with the imbalance problems involving China. It gave China an easy out because everyone was busy attacking the United States for flooding the world with dollars and creating unwanted capital flows. Nevertheless, Korea has a number of advantages in the G-20. Its role in green technology and the environment is strong and can be parlayed into something stronger. Korea is a very good example of business and government working together. We are past the point where people worry about the size of government. Instead, the worry is how effective government can be. Education is excellent in Korea, and innovation-led growth has been excellent. But the Achilles heel in Korea is the demographics.

In the United States, blue collar workers have been losing real wages for 15 years or more. I do not think that is the case in Korea, but I think there is a certain level of disquiet in terms of distribution. I put Korea with Canada and Australia in the G-20 of countries who “punch above their weight.” Certain nations deeply believe in multilateralism.

What will France do for 2011? Well, maybe they will put their finance minister into the IMF. But France is part of the EU — the EU has at least one-quarter of the chairs of the G-20 — but they have to get beyond the problems of Europe. I think there are a lot of issues that need to be dealt with like financial market regulation, oil markets, the development agenda. These are all things that France needs to deal with, and one has to question whether or not France will be able to do that. Or will they be dominated by their European

concerns? The keys to success going forward in the short-term are restoring confidence, more win-win outcomes need to be created as many economies are below their potential growth rates.

In terms of who is in charge, there are all of the “G” possibilities: The G-7, the G-8, the G-0, the G-2. But none of these are very appealing, and the G-20 is therefore the only game in town. There is very little choice if we believe in globalization and multilateralism. Let’s hope that it can be effective and the right way can be found to implement much needed measures.

Questions & Answers

Q Many people say that exchange rate fluctuations in response to international shocks are much better than adjustments in consumption or in terms of growth changes in individual countries. Any comment on this?

A I think that the current system of allowing exchange rates to float is the right system. Of course, there can be externalities when a lot of money is released into the system, as the Federal Reserve did recently. That being said, when Chile put controls on short term capital I was one of the few in favor. I felt that a small country like Chile, which is very open, could defend itself better if it were not subjected to hot money. If Brazil had just focused on short-term capital I would have been equally sympathetic. I think the problem is that if you put capital taxes on other types of capital inflows, portfolio and others, that is essentially using intervention rather than domestic policy. I think Brazil had high interest rates for other reasons. So, I think exchange rates should find their equilibrium, but some countries do literally need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speculative, short-term capital flows. I think the IMF has made a major shift, perhaps an over-adjustment, to being sympathetic to these capital taxes. I would limit it to flows of less than a year.

Q Can you clarify what would be beyond the Doha round?

A I think the trouble with Doha is that there are not enough benefits to completing the round. Just the issues that no one wants to deal with are left. I do not have the full solution, but some argue that the WTO should be turned into an adjudication mechanism. I am very pessimistic on the completion of Doha. Ten years is long enough. In the meantime, most of the new trade is either under FTAs or under a different arrangement, so Doha is largely irrelevant except for the symbolism.

Q How do you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lue of the RMB and trade imbalances?

A I think the point has been made that these imbalances are going to exist, and one way to reduce these imbalances is to adjust the exchange rate. Whether it is because of international pressure or because of inflation in China, an appreciation of the exchange rate could be seen as a positive long-run step. But I see a disconnect between the central bank governor of China arguing that the dollar should not be the center of the financial system at the same time the Chinese currency is being managed very actively.

Q What are the prospects of restructuring the debt of some European nations?

A Leaving the eurozone is a very large step. That is the absolute end game, and Greece does not have a good track record in managing

its own monetary policy so I would try to avoid that. But one step short of that is a debt restructuring. I understand that some of the debt is held by German banks, but the only way to get Greek growth restarted, given that the exchange rate is off the table, is a radical restructuring of the debt. Even the soft restructuring being discussed is a classic IMF problem. The inevitable is being delayed, and a lot of money is going to be spent for no reason. Yes, a haircut will bring losses but at the end of the day Greece has the potential to restart growth. Without that, I do not see that Greece has any chance of getting out of their problem. If they have no chance, then the EU and the IMF will be spending a lot of money so that in 2013 or 2014 they face the inevitable and have to restructure the debt.

The role of the IMF in all of this is interesting. Does the IMF need a European head to understand the problems of Europe? I think the opposite could be true. Greece should not be treated any differently than Brazil, Mexico, or Indonesia. But I want to stress, that unless the debt is restructured, there is no sustainable outcome for Greece.

Q Who do you think is qualified to lead the IMF? Is Dr. SaKong II being considered?

A I think Dr. SaKong is a very well-qualified candidate to lead the IMF. A think tank in Washington DC did a survey, and on the list were 15 names. Dr. SaKong was on that list. There has been a lot of talk prior to Dominique Strauss-Kahn resigning that the leadership positions at the World Bank and the IMF should not be reserved for

Americans and Europeans. Many nations within the G-20 have stated their general appreciation for that. But, that is just talk. Are the Europeans really ready to give up the IMF chair? Are the Americans deeply committed to giving up with World Bank chair?

The forces that will determine where the person comes from are odd this time because the presidency of the IMF did not come up in a natural way. With more time to think about it, I think the emerging economies could have coalesced around one or two candidates. But because it happened so abruptly there are now at least ten candidates. Like in any voting pattern, this plays into the hands of the established power structure because the emerging markets have not had the chance to provide their best candidates. Maybe that will still happen, I don't know.

I think it is unfortunate that the leaders of Europe say that at this important time, a European is needed to lead the IMF. I do not think that is in the spirit of the G-20 and multilateralism, and it may actually be wrong. It might actually be better for a non-European to deal with the European problem because this would provide some distance from the reality.

Q Was the IMF too soft on Greece?

A Well, what can the IMF do? Yes, the IMF imposed very harsh conditionalities in Korea. But Greece does not have monetary policy. So the only thing the IMF can tell them to do is to fix their fiscal position.

기रो에 선 세계화와 다자주의, 그리고 G-20*

Danny Leipziger

세계경제 내에서 경제축의 이동은 기록상으로 잘 입증되어 쉽게 알 수 있으며 지금도 진행 중이다. 중국경제가 앞으로 20~30년 동안 얼마나 잘 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10년간 중국이 이룩한 경제적 실적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의 경제가 세계경제의 세력구조에서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해온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경제위기가 선진국으로 인해 촉발되었지만 이의 회복은 선진국이 아닌 신흥시장국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잘 확인되고 있다. 사실 이 신흥시장국들(나는 이들을 신흥경제강국이라 칭하고자 한다)은 이번 위기의 확대심화에 대한 완충효과를 제공해주었다. 이번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많은 선진국들은 재정적 어려움과 그 후유증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는 일부 국가들의 향후 경제성장률에 나쁜 조짐이다.

세계경제 판도를 변화시키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자본이동에 대한 시각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세계 각국은 자본이동에 대한 개방수준을 종전처럼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심지어 IMF 내에서조차 엄청난 자본유입에 대한 각국의 대처방식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왔다. 무역 또한 세계경제 판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남남무역(south-south trade) 또는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이 세계무역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많은 무역협정들(그것이 FTA 형태이든 아니면

* 이 글은 2011년 5월 24일 개최된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의 내용을 녹취하여 번역·정리한 것으로 필자의 개인 의견을 밝혀둔다.

다른 형태이든)이 도하(Doha)협상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따라서 무역확대가 어디에서 크게 발생하고 있는지와 정치적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과는 연관성이 없다.

내가 2004년~2008년간 위원장 직을 맡았던 성장위원회(Growth Commission)는 성장동력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문제들을 다루었는데, 그 보고서에서는 동아시아가 시사하는 메시지를 강조한 바 있다. 즉, 성장을 위해서는 특정재료가 필요하지만 요리법은 각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경제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시각이 바뀌고 있는지가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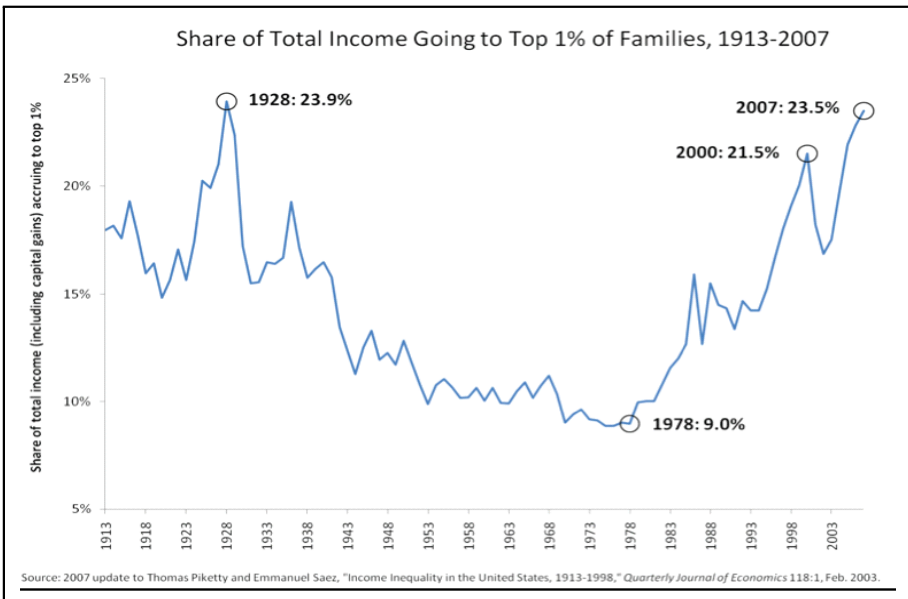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국가 간의 격차가 확산(divergence)되는가 또는 수렴(convergence)하는가의 문제였다. 많은 연구가 수렴 즉, 한 나라의 경제가 성숙해지면 경제성장률이 감소한다는 것 —에 대해서 이루어졌는데, 국가 간의 수렴(소득격차 감소)은 국내에서의 격차확대를 수반하고, 그것은 다자주의의 맥락에서 풀어가야 할 하나의 도전과제이다. 이러한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다자주의에 대항하는 하나의 세력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현실을 보면, 사실상 경기부양책이나 제2차 양적완화정책(QE2) 중 어느 것도 미국경제를 침체에서 끌어내지는 못했다. 오히려 신뢰에 대한 변화가 유용하였는데,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필수적인 신뢰에 대한 변화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 확대에 의해서 촉발되었다. 이는 누구나 정확히 기대했던 바는 아니었지만,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이 그것을 대신하지는 못하였다. 신뢰가 결여된 이유 중 하나는 실업률이 매우 높았고, 그러한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2007~2009년 동안에 가계의 2/3가 순자산의 감소를 겪었고 중산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이와 함께 소득격차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보

면, 그 이후 미국의 소득분배는 훨씬 더 불균형한 상태가 되었다.

오바마(Obama) 대통령은 연두교서를 통해 미국은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교육,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학자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생산함수의 요소이다. 미국은 교육 면에서 형편없고, GDP 대비 부채비율이 100%에 이르는 매우 높은 부채를 안고 있다고 말한 오바마 대통령이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현재 미국 시스템 내에는 유동성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지금 이를 되돌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동성의 흡수는 금리인상만 유발할 뿐이기 때문에, 미국은 성장을 다시 점화시킬 올바른 정책조합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또한 다자주의의 결과물인 미국 내 소득분배의 불균형 문제도 있다. <그림 1>에 의하면, 2007년도에 미국 인구의 상위 1%가 국민소득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28년 이래 최악의 격차였다. 참

<그림 1>



고로, 1978년에는 상위 1%가 국민소득의 9%를 차지했다.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유럽은 유로존의 지나친 확대와 느슨한 재정 감독, 그리고 고정환율로 인해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언론계의 거의 모든 평론가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유럽 전체, 특히 그리스에 대한 현재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매우 많은 비용이 든다. 나는 채무재조정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본다. 우선, 유럽은 IMF와 함께 남부 유럽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조치들은 별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리스는 재정적자가 GDP의 10%나 되기 때문에 재정부문을 축소하여야 한다. 통화정책은 프랑크푸르트에서 결정되고, 환율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정책대안이 없다. 당장 손쉽게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 없는 그리스가 어떻게 재정적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유로존에 대한 신뢰감 소로 인해서 나타나는 리스크는, 유럽 각국을 저성장 상태로 지속시킴으로서 발생하는 리스크보다 훨씬 낮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독일의 흑자가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다.

중국 및 여타 BRICs 국가들

중국 경제의 성장은 괄목할만하다. 문제는 G-2가 다자간 시스템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5조 달러(구매력 기준이 아닌 경상가격 기준 GDP 산출에 근거함) 규모의 중국 경제는 사실 연간 10%씩 성장한다. 이는 매년 5,000억 달러의 증가세이다. 이러한 성장 증가규모는 적어도 세계 120개국의 GDP를 합한 것보다 더 크다. 그렇다면, 성장에 다소 조속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즉, 나는 중국이 경제규모에 걸맞는 모든 책임을 제대로 발휘할 준

비가 되어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기침체 이전에도 세계경제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는 요인들은 이미 많이 있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그 여파로 인해 이러한 요인들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경제시스템이 위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자본이동에 대한 의존도 감소, 부채수준의 증가, 무역마찰의 증가, 그리고 다양한 성장원천의 대두 등이 나타날 것이다.

모두가 중국의 환율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는 고용 및 수출을 촉진시키는 여러 요인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꼭 나쁜 정책은 아니지만, 다자주의에 영향을 준다. 지금까지 G-20은 지속 불가능한 불균형과 환율문제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고, 또 각국 정부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할 수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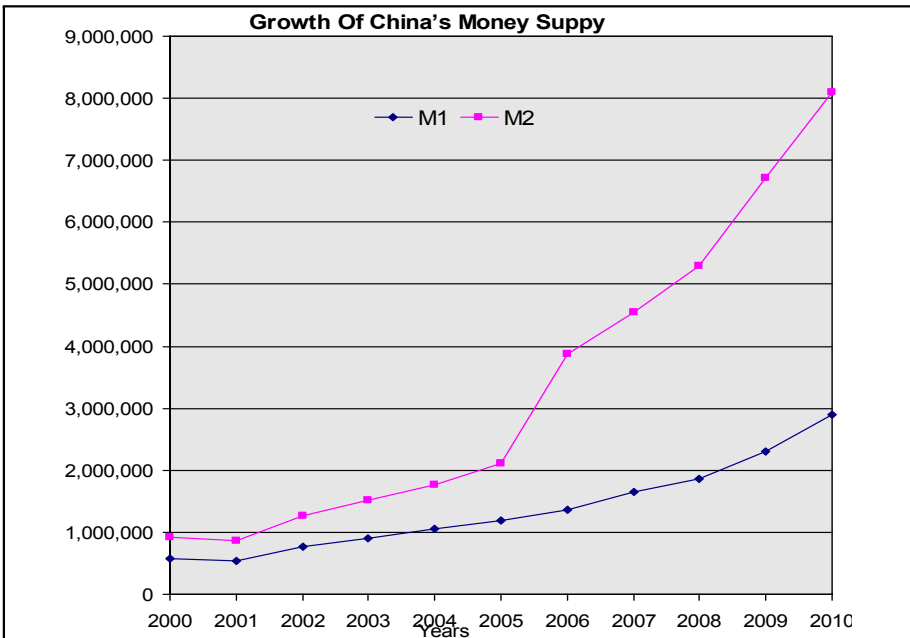
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은 인플레이션에 관한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림 2>에서 보여주고 있는 지난 10년간의 통화공급(M2)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통화공급은 8배 증가하였다. 만일 10년간의 연간 성장률이 10%였다면 통화공급은 100% 정도 증가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이 800%까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물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물가는 억제되어 왔으며, 그리고 지금 이러한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BRICs 국가들 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최근 브라질은 많은 주목을 받아왔는데, 그 이유에는 자국의 환율상승을 원하지 않았던 브라질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기꺼이 취한 부분도 있다. 과거 IMF 내에서는 특정 종류의 자본이동을 저지하려는 국가들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1980년대에 칠레가 자본수입세를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는 대대적인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 브라질이 자국 통화의 절상을 막기 위해서 더 높은 자본수입세를 잇따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브라질은 매우 높은 국내부채를 안고 있는데, 이는 금리도 매우 높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브라질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중국의 수요와 높은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서 잘 하고 있다. 하지만 브라질의 산업정책에 대한 내부적 논란은 많이 남아 있다.

인도의 경우는 매우 높은 재정적자를 안고 있다. 그리고 빈곤, 열악한 지배구조(특히 지방차원에서), 국내 인프라의 제약 등으로 인한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인도는 방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 인도가 부상하여 다가오고 있지만, 아무도 중국이 걸어온 경로를 답습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BRICs에 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남아프리카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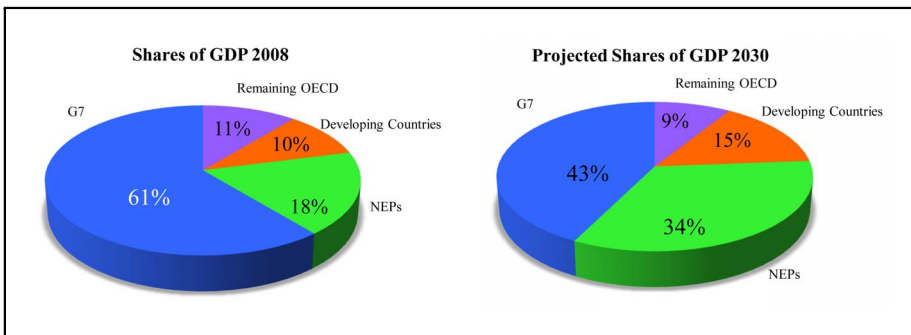


공화국은 에너지의존도가 매우 높고, 화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며, 실업률이 높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규모가 아프리카에서는 클지 몰라도, 세계적인 주역이 될 정도로 크지는 않다. 러시아 경제는 비교적 열악한 지배구조를 가진 자원부국과 비슷하다. 러시아는 법치와 다른 이슈들로 인해, 선진그룹인 G-8에 포함될 만한 자격은 없는 것 같다.

경제력 및 무역 판도의 변화

IMF 및 OECD 그리고 여타 기관들의 평가치를 가지고, 오늘날 G-7 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2030년의 비중을 추정하여 그림으로 살펴보면 61%에서 43%로 감소한다(그림 3). 한국을 포함한 신흥경제강국들은 급격히 성장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력의 구조적 이동이 나타날 때, 다자주의의 중요한 측면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림 3〉



세계화를 위협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무역체제는 실질적으로 와해된 상황이다. 좋은 소식은 전세계적으로 관세가 비교적 낮다는 것이다. 나쁜 소식은 도하라운드가 미래 이슈가 아닌 과거 이슈에

매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도하라운드도 상징적으로는 중요하게 남아있지만 실제로는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 상태이다. 혹자는 WTO를 분쟁조정기구로 만들고, 너무 오랫동안 끌어온 도하라운드는 잊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협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각국 정부가 협상에 임할 때 각국 내에서는 항상 이득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 간에 다툼이 있기 마련이라는 점이다. 그 동안 이득은 항상 손실을 덮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큰 것이었다. 문제는 현재 관세가 매우 낮아졌고 무역이 아주 자유로워져서, 도하라운드가 있건 없건 간에 무역으로부터 이익이 창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도하라운드로부터 발생할 추가적인 이익은 각국이 만들어내야 하는 협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것이다.

세계화를 위협하는 또 다른 요소는 자본이동이다. 나는 강력한 규제에는 찬성하지만 토빈세(Tobin's taxes)는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토빈세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브라질이 이에 해당되는데, 자본수입세가 브라질의 정책선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

그 외에도 초국경적인 중요한 이슈들은 많이 있다. G-20에서 이와 같은 이슈들이 일부 다루어지긴 하였지만 대다수는 그러하지 못한 상태이다. 대부분이 조세제도, 부패, 그리고 불법적인 자본이동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처럼 초국경적인 이슈들은 다자적 접근방식에 의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수단들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기후변화 및 이민문제와 같은 큰 이슈들도 있는데, 이 또한 국제적으로 수용될만한 해결방안이 우리에게 아직 없다.

내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수많은 새로운 도전과 위협들로 인해서 변화하고 있는 시스템과 이러한 새로운 도전을 다룰 수 있는 기존의 기구나 수단을 대비시켜보는 것이다. IMF가 그러한 기구 중 하나이다. IMF는 국제적 불균형, 환율, 그리고 초국경적 리스크 등의 감시를 비롯한 일련의 새로운 책무들을 모두 떠맡음으로써 신뢰를 받고 있다.

다자주의

IMF에게는 부과된 일들이 많다. 상호평가프로그램의 사무국 역할,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요구하지도 않은 국가들에 대한 금융안정평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요 금융시장국들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감시역할은 모두 좋은 것들이지만, 지금까지 IMF가 내놓은 안들이 시행된 것은 별로 없다.

다자주의와 관련해서는, 도하라운드를 넘어설 정도로 훨씬 더 강력한 무역체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도하라운드는 이미 실익을 잃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다른 대체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Danny Rodrick은 민주주의와 성장의 역설에 관한 그의 새로운 저서에서, 다른 형태의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세 가지(impossible trinity)’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impossible trinity’란 고유의 통화정책, 고정환율, 그리고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말한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또 다른 형태의 ‘impossible trinity’는 민주주의, 국가경제정책, 그리고 세계경제정책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세 가지 중 두 가지는 병행할 수 있지만 세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각국 정부가 고용, 소득, 무역보호를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다자적인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수준

의 강력한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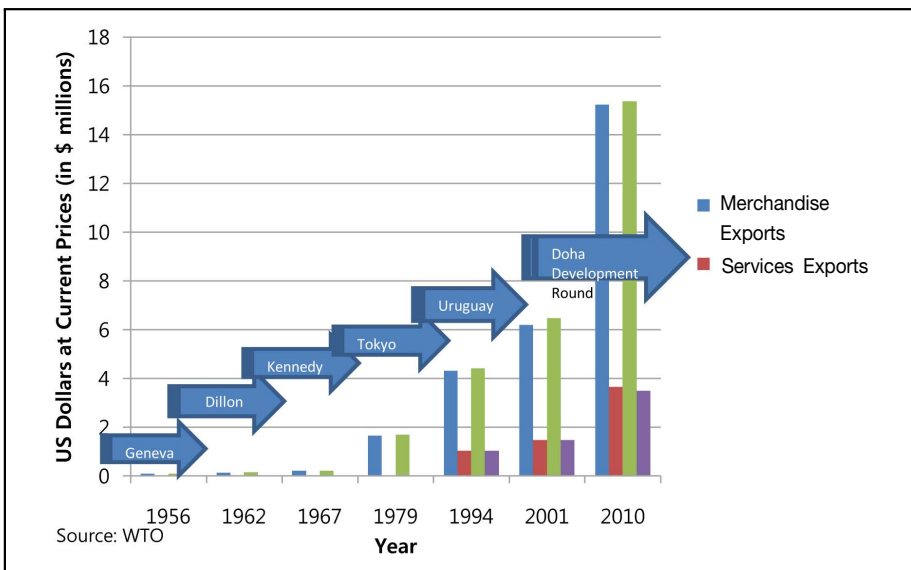
과거에 기업이 세계화의 주역이었던 것은 무역으로부터 얻는 수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앞으로도 무역이 2000~2007년 동안만큼의 역동성을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는 2000~2007년이 세계경제 역사상 비정상적인 기간이었던 탓도 부분적으로 있다. 그것이 비정상적이었던 이유는 엄청난 무역증가, 매우 높은 성장률, 매우 낮은 금리, 낮은 인플레이션 등 많은 것들이 유동성 과잉으로 인해 이루어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업이 세계화 및 다자적 해결방안의 지지자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미국 내 여론지표로 사용되는 Pew 설문조사에 의하면, 10년이 채 안 되는 몇 년 전만해도 75%가 넘는 미국인들이 국제무역은 유익한 것이라고 응답했는데, 1년 전에는 이 수치가 50% 이하로 떨어졌다. 미국인들은 미국 내의 수많은 병폐가 세계화의 탓이라고 생각한다. 해외위탁업무(off shoring)도 있지만, 사실 일자리 및 소득이 감소한 것 대부분은 세계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미국 내의 구조적 문제와 관계된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친(親)다자주의가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일부 불균형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에 불균형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G-20이 IMF보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오래 전부터 IMF는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진단해왔지만 집행 매커니즘(mechanism)이 없었다. 또한, 나는 산업정책면에서 수용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를 전략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정부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나는 녹색성장 촉진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녹색성장 의제와 경기부양책이 매우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대항적인 거시적 정책이 필요했지만, 한국은 단순히 교량을 다시 도색 한다거나 하는 일 대신에 전략적 의미가 있는 일을 하고자 하였다.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는 합리적인 조치였다. 왜냐하면 미래의 수출시장이 거기에 있고, 한국 정부가 기꺼이 부담을 지고자 할 정도로 중요한 외부효과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를 좀 더 미숙하고 좀 더 근시안적이고, 그리고 훨씬 더 보호주의적인 산업정책의 일부 다른 측면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림 4>는 도하라운드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 현상을 보여준다. 우선, 도하라운드는 시간을 너무 오래 끌고 있다. 벌써 10년이 되었고, 어떤 시점에서는 그것이 소멸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GATT와 WTO의 다자간 협상에 비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 이와 함께, 도하라운드에서조차 다루지 못하는 서비스의 수출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도하라운드에 대한 관련성을 떨어지게 만든다. 도하라운드가 상징적 중요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구제되지 못한다면, 무역에 대한 새로운 이니셔티브(initiative)가 필요하다.

<그림 4>



누가 다자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 G-7이 한 가지 대안이지만, 대부분의 G-7 국가들은 저성장 및 고(高)부채와 관련된 신통치 못한 정책선택에 당면해 있다. 우선 유럽은 내부적인 문제들로 거의 소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유럽이 안고 있는 인구구조적 문제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실업, 소득 분배, 부채로 인한 엄청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일본은 심지어 최근의 경제위기 이전에도, 15년 동안 저성장의 멍에 간혀있었다. 근본적으로 일본은 높은 국가부채와 인구구조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도 저성장을 지속해야 할 운명이다. 여기에 한국이 유의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일본의 성장을 저해해온 인구구조적 요인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G-7 국가 중에서 캐나다를 기대주로 생각해볼 것을 자주 언급한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상황하에서, 캐나다는 풍부한 자원과 경제규모, 훌륭한 국가경영, 그리고 좋은 이민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위기도 잘 극복했다.

BRICs는 흥미로운 정치적 그룹이지만, 그들은 서로 너무 다르다는 점이 문제다. ‘BRICs’라는 용어 외에는 그들을 연결해주는 것이 거의 없다. 이들 국가가 모여 회의를 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자 할 때면, 그 성명은 항상 일반적인 것에 불과하고 공통분모가 매우 적다.

G-20은 19개국과 EU로 구성된 흥미로운 그룹이다. G-20은 경기부양 프로그램과 글로벌 신뢰회복을 매우 훌륭하게 이루어냈다. G-20이 2009년과 2010년에 이룩한 성취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은 충분히 조직화되지 않은 하나의 클럽에 불과하다는(G-7보다 더 큰 대표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G-20은 집행능력이 없다. G-20은 거시경제적 집행에 있어서는 IMF를 활용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리고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은행과 같은 기구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에 필요한 투자규모는 막대하여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자원에서 나오는 정도로는 안될 것이다. 세계은행의 자본이 두 배가 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에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G-20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이의 집행능력과 관련이 있는데, G-20은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루어나갈 수 있을까?

불균형 및 초국경적 규제에 관한 이슈들도 존재한다. ‘대마불사(too big to fail)’ 자체보다는 오히려 ‘규제차이에 따른 이익추구행위(regulatory arbitrage)’가 중요한 이슈이다. 집행능력도 없는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가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날의 세계는 각종 제휴와 연합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과연 누가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실제로 분석을 하고 집행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많은 부분을 IMF가 담당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IMF가 신뢰할만한 파트너로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에게는 보다 나은 대안을 줄 수 있는 현명하고 초국가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현재 EU는 내부문제에 붙잡혀 있고, 미국은 정치적 문제로 인해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중국은 아직 나설만한 처지가 못 된다. 정말 공정하게 말하면, 중국이 OECD에 가입할 경우 그것은 중국의 1인당 소득수준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떨어진 수준에서 하게 될 것이다.

G-20의 역할

한국은 G-20에서의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 나온 결과의 대부분은 국내정치와 관련된 것

이기 때문에 이를 쉽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한 달 전에 발표된 제2차 양적완화정책(QE2)은 중국이 관련된 불균형 문제를 다루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음은 분명하다. 모두가 전세계를 달러로 넘쳐나게 하고 또 원치 않는 자본이동을 유발한 미국을 공격하는 데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QE2는 중국이 이 불균형 문제로부터 쉽게 빠져나가도록 도와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G-20에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녹색기술과 환경부문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한 역할은 보다 강력한 다른 역할로 확대될 수 있다. 기업과 정부의 공조 면에 있어서도 한국은 매우 모범적인 사례이다. 정부의 규모를 걱정하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 대신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정부가 될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교육이 훌륭하였고 또 혁신주도적인 성장도 탁월하였다. 하지만 인구구조 문제는 한국의 아킬레스건이다.

미국에서는 육체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15년 남짓 감소해오고 있다.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분배 측면에서 볼 때 일정 수준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는 한국을, G-20 내에서 “자신의 체급보다 더 큰 역량을 발휘하는” 캐나다나 호주와 같은 반열에 둔다. 어떤 국가들은 다자주의를 몹시 신뢰하고 있다.

프랑스(2011년도 G-20 정상회의 주최국)는 2011년에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아마 재무장관을 IMF 총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는 EU 회원국이다(G-20 회원국 중 최소한 1/4이 EU 회원국이다). 그렇지만 프랑스는 유럽의 문제들을 넘어서 금융시장의 규제문제, 석유시장 문제, 그리고 개발의제 등 다루어야 할 이슈들이 많다. 이 모든 것들을 프랑스가 다루어야 하는데, 프랑스가 그러한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지 못하면 프랑스는 유럽의 걱정거리들에 휩쓸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성공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단기적 핵심과제

는 신뢰회복이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자국의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만큼, 모두가 승자가 되는 경우를 보다 많이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누가 이러한 일들을 맡아서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G-7, G-8, G-0, G-2 등 이른 바 ‘G’로 대표되는 세계경제그룹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중 어느 것도 적합한 것이 없기 때문에, G-20이 유일한 대안이다. 우리가 세계화와 다자주의를 신봉한다면 선택의 여지는 거의 없다. G-20이 효율적인 그룹이며, 필요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보자.

질의 · 응답

질문 국제적 충격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많은 전문가들은 각 개별국가들의 소비나 성장률의 조정보다는 환율의 변동이 더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답변 나는 환율변동을 허용하는 현 시스템이 옳다고 생각한다. 물론 최근에 미국 연준(Federal Reserve)이 했던 것처럼, 시스템에 자금이 많이 유입되면 외부효과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칠레가 단기자본을 통제했을 당시 나는 몇 안 되는 지지자 중 하나였다. 칠레와 같이 매우 개방된 소규모 경제가 핫머니(hot money)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보다 훌륭하게 자국을 방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브라질이 단기자본에 집중을 했더라도 나는 마찬가지로 지지했을 것이다. 포트폴리오(portfolio) 등 다른 유형의 자본유입에 자본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국내정책의 운용이라기보다는 중대한 개입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다. 브라질이 고금리를 겪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환율이 자체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문자 그대로 투기적 단기자본의 유입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나의 시각이다. IMF는 입장을 크게 바꾸어(아마도 과잉조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러한 자본세에 호의적이 되었다. 나는 자본세의 대상은 1년 미만의 자본이동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질문 도하라운드를 넘어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

답변 내가 생각하는 도하라운드의 문제는, 도하라운드를 종결시킨

다해도 그리 큰 이득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도 다루고 싶어하지 않는 이슈들만이 남아있다. 내가 완벽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WTO가 법적 중재기구(adjudication mechanism)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나는 도하라운드가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이다. 10년이라면 충분히 긴 세월이었다. 반면에, 자유무역 협정(FTAs)이나 다른 협정 하에서 대부분의 무역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도하라운드는 상징성을 빼고 나면 크게 상관이 없다.

질문 중국 위안화(RMB)의 가치와 무역불균형 간의 관계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무엇인가?

답변 나는 이러한 불균형들이 앞으로도 지속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이와 같은 불균형들을 줄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환율조정이 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국제적인 압력 때문이든, 아니면 중국의 인플레이션 때문이든, 환율절상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조치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중국 중앙은행 총재가 달러화는 세계금융시스템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위안화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질문 일부 유럽국가들의 채무재조정 전망은 어떤가?

답변 유로존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조치이다. 유로존 탈퇴는 완전히 최종단계이다. 그리고 그리스는 자국 통화정책의 운용실적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에게 유로존 탈퇴를 피하라고 하고 싶다. 그러나 유로존을 떠나기 전의 한 단계로 채무재조정이 있다. 나는 그리스가 부채 일부를 독일은행들로부터 빌린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환율이 논의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그리스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과감한 채무재조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원만한 채무재조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조차도 IMF의 전형적인 문제이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지연되고 있으면 이유 없이 많은 돈이 나가게 된다. 물론 부실자산을 정리하면 손실이 발생하겠지만, 중국에는 그리스가 성장을 다시 시작할 잠재력을 갖게 된다. 이런 과정 없이는 그리스가 문제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본다. 그리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EU와 IMF는 2013~2014년에 그리스가 필연적으로 당면할 채무재조정 때문에 또 다시 많은 돈을 쓰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일에서 IMF의 역할이 흥미롭다. 유럽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IMF는 유럽 출신의 총재가 필요한가? 나는 IMF 총재가 유럽인이 아니어도 유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스가 브라질이나 멕시코, 인도네시아와 조금이라도 다르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는 지속 가능한 결과를 절대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질문 IMF의 총재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사공일 박사가 후보에 속하는가?

답변 나는 사공일 박사가 IMF 총재 후보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Washington DC에 소재한 모 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IMF 총재 후보군(群)은 총 15명으로 나타났는데, 사공일 박사도 그 후보군에 속해 있었다. Dominique Strauss-Kahn 총재가 사임하기 전부터 세계은행 및 IMF 총재 자리가 미국인과 유럽인들에게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 많았다. G-20 내의 많은 국가들도 이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였다. 하지만 말 뿐이었다. 유럽인들이 정말 IMF 총재

자리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있을까? 미국인들이 정말 세계은행 총재 자리를 포기할 의사가 있을까?

이번 IMF 총재직 선출 문제는 정상적인 임기만료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지역 출신이 IMF 총재가 될지 그 결정방식이 보통 때와는 다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더 있다면, 신흥국들은 1~2명 정도의 후보로 압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갑자기 발생한 관계로 현재는 적어도 최소한 10명의 후보들이 있다. 어느 투표 형태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출 건도 기존의 세력 구조 속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그 동안 신흥시장국들은 최고의 후보들을 내세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에는 유럽인이 IMF를 이끌어야 한다는 말을 유럽의 지도자들이 한다는 것은 불행스러운 일이다. 이는 G-20과 다자주의 정신에 맞지도 않는 일이며 실제로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사실 유럽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비(非)유럽인이 더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실제상황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질문 IMF가 그리스에게 너무 부드럽게 대하지 않았는가?

답변 IMF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IMF가 한국에게는 아주 가혹한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그리스에게는 통화정책이 없다. 그래서 IMF는 그리스에게 재정상황(fiscal position)을 바로잡으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Markets, Economic Change, and Political Stability in North Korea*

Marcus Noland

Today's talk is largely derived from a book I wrote with Stephen Haggard,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Diego, that came out earlier this year titled, *Witness the Transformation: Refugee Insights into North Korea*. The book is based on two surveys of North Korean refugees. One conducted in China and the other in South Korea — although technically speaking, I think the people in South Korea are not refugees.

In the first survey, conducted in China in 2005, we surveyed more than 1,600 people. The quality of the survey did not meet the standards of contemporary social science because of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survey was conducted. The problem with this survey is that it was done surreptitiously because the people we interviewed were in effect illegal aliens.

The second survey of 300 refugees was conducted in South Korea in 2008 under much more secure legal conditions. We were able to administer a much longer and more nuanced questionnaire. It was gratifying for us to see that the results we obtained from the second

* Transcript of a speech given at the IGE/Samsung Electronics Global Business Forum on Wednesday, June 29, 2011.

survey largely lined up with the earlier study done in China, and that the two surveys reinforce each other. Most of the specific results that I will discuss this morning are actually derived from the second survey, done in South Korea.

The refugees are of interest for two reasons. First, we are interested in the refugees as human beings and they constitute a first order humanitarian problem in and of themselves. The second reason for interest is that they provide insight into the conditions in North Korea.

My talk is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I will talk about the refugees themselves. Then I will discuss what they can tell us about North Korea. Finally — being from the Peterson Institute and being encouraged to offer policy prescriptions — I will ask the question, “What is to be done?” and go into policy.

The basic demographics in the sample are a little different in the two surveys. In the China survey, men and women were represented roughly equally. In the survey in South Korea women predominated, as they do in the refugee/defector population that is now settled in South Korea. The age span ranged from adolescence to older people, but the bulk of the respondents were in their peak working ages of their 30’s or 40’s. Geographically they were from all provinces and regions in North Korea with the provinces of North and South Hamgyong predominated, as they do in the general refugee comm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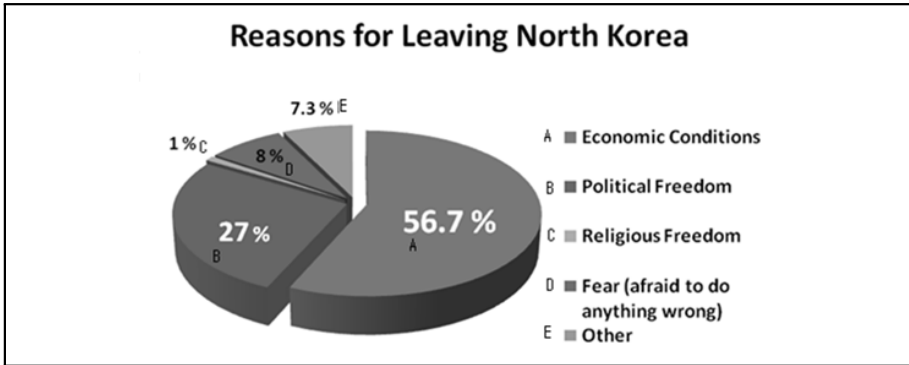
Educational attainment is one area where the two surveys diverged.

In the survey conducted in South Korea the median respondent had a high school education. That was not the case for the survey in China. One of the basic methodological issues that we face in this work is that we ask people questions and we have to assume they are telling the truth and that their memories are correct. Educational attainment is one area, that you might expect some respondents to exaggerate their credentials. So, it is really striking that in the China survey so many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had very low levels of education. This contradicts the claims by the North Korean regime about the educational attainment of the people in North Korea.

Finally, not only do we have information about the people themselves, we also have information about their fathers. What is striking when we look at this data is how little intergenerational socio-economic mobility there appears to be in North Korea. If your father was a farmer, then you are also a farmer. If your father was a laborer, then you are also a laborer, and so on. There is a bit of an upward drift in educational attainment, people on the whole tend to be a little better educated than their parents, but socio-economic mobility or occupational mobility is actually quite slight.

In both surveys we asked the refugees why they left North Korea. In the China survey, they overwhelmingly cited economic motivations. In the South Korean survey a majority cited economic reasons as well, but more than a quarter of the sample cited political reasons for leaving North Korea(see figure 1).

〈Figure 1〉



When we did the China Survey one of our collaborators was a psychologist, so a number of questions are related to the psychological or mental health status of the respondents. I think it is fair to say, in a clinical setting probably half or more of the people that we interviewed would be diagnosed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deed, there is a clinical literature being compiled, by psychologists and medical doctors, in South Korea documenting high levels of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the population. When we analyze the data statistically it appears that these problems relate to both their experiences in both North Korea and China — where most of the people transit on their way to South Korea.

In North Korea, what we find is that the famine of the 1990's continues to have a profound effect on society. About one third of the respondents indicated that either they had a family member die or had become separated from family during the famine period. One thing that we found surprising was a very high share of respondents indicated that they were unaware of the international food aid effort,

when they were in North Korea. The vast majority of those who were aware believe that they did not personally benefit from the aid and that most of the food went to the army or high government officials. This does not prove that this is the case, but it is simply what the respondents believe. It turns out that being in that category, of people who knew of the aid but did not believe themselves as beneficiaries, is a profoundly demoralizing experience. These people feel as though they were abandoned at their time of need, causing a profound impact on their psychological status — even greater, in statistical terms, than being incarcerated in the prison system.

As mentioned earlier, the other reason refugees are of interest is for the window they can provide into North Korea, in this information constrained environment. One of the problems we have is that we cannot follow individuals within North Korea over time. What we can do is take the respondents that we have and stratify them by the time. For example, in Figure 2 and Figure 3, we break the sample up into three parts depending on when they left North Korea: the famine period, which we define as 1998 and earlier, the post famine period from 1999 to 2002, and the post reform period from 2003 on. Each group is roughly the same size, representing one-third of total sa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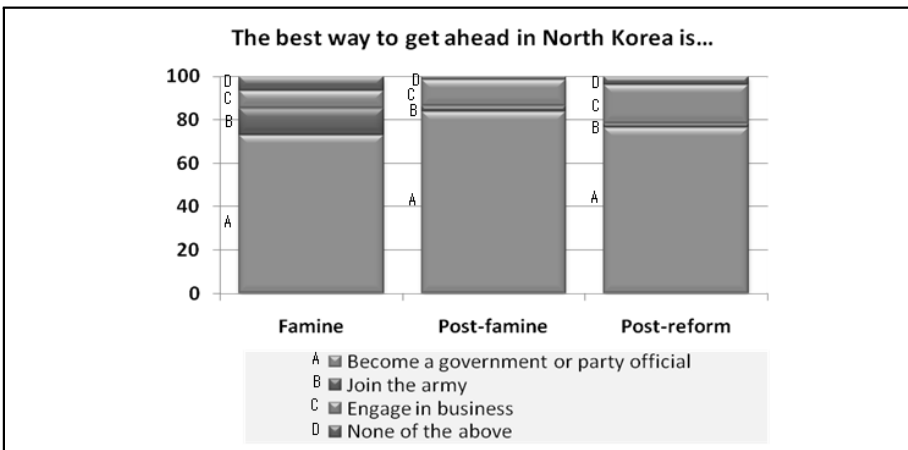
When we asked them, what was the easiest way to make money in North Korea, they responded that it would be going into business. Sadly, working hard at your assigned task is not much of a way to make money in North Korea — in fact, in the most recent period it disappears almost entirely. What is striking about Figure 2 is that

engaging in corrupt or criminal activities is increasingly seen as the easiest way to make money. We then asked them what the best way to get ahead in North Korea is, and going into business was the response by a growing share of respondents. The military, conversely, is increasingly not seen as a way to get ahead (see Figure 3).

〈Figure 2〉



〈Figure 3〉



When I present this information to Washington, they say “Wait. North Korea has military first politics.” I say, “Yes, military first politics may be very good if you’re a general, but it appears that military first politics are not a very good way to get ahead if you are a conscript.” What is striking about Figure 3 is how much the party and the state are still seen as the best way to get ah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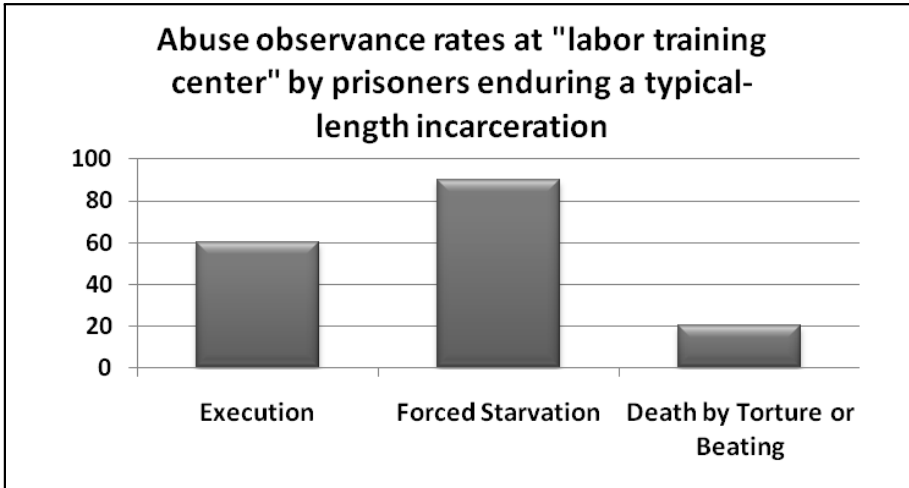
Indeed these two results are linked. We broke up the sample and simply looked at people who reported that their occupation had been working for the state or working at party offices, in North Korea. They report increased amounts of corruption amongst their colleagues and interestingly they also report increased amount of time in their offices devoted to ideological indoctrination. It appears the central authorities understand the fraying control they have over this system and they are trying to reinforce the ideological fidelity of the state and party cadre. Nevertheless keep in mind this basic result; corruption is a growth industry and the state remains the basic way of getting ahead.

One of the things we find, that we did not anticipate, is the degree of criminalization of economic activity. Legal code changes undertaken in North Korea have greatly broadened the range of economic crimes.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as an approximation, a typical non-elite North Korean probably runs afoul of one of these rules or regulation in their everyday behavior, making everyone in some sense a criminal. The police have extraordinary discretion with respect to whom to arrest and detain and the conditions in detention are horrific. This creates a perfect instrument for extortion. The

police can basically come and grab anybody and put them into a facility where it is known that abuses are rampant. As a consequence, people are eager to pay bribes to keep themselves and their family from being entangled in such a system. In short the penal system has gone from its traditional role of enforcing political repression to a broader role of acting as a platform for economic predation on the population.

We found people involved in the market are arrested at a fifty percent higher rate than their peers. If they were arrested we asked them if they received any kind of formal proceeding or trial before being incarcerated and only twelve percent said that they had. In North Korea, there are really four classes of penal institutions; there are misdemeanor jails, felony prisons, the political prison system, then coming out of the famine experiences of the 1990's there is a new form of detention facility which has actually been codified in the legal code, called labor training centers. This is where many of these economic criminals are housed. So, we would expect going from the labor training center, to the jail, to the prison, to the political prison an escalation of abuse, and in fact we observe an escalation of abuse. What is really striking to us is how mild that escalation is, especially when you take into account the periods of detention or incarceration are shorter in the labor training centers and the jails than they are in the political gulag. So, when you look at a person incarcerated for a typical length of a period of months in one of these labor training centers, the likelihood of them seeing abuse is really very high (see Figure 4). So these abuses within the system appear to be pervasive and not limited only to the worse of the political pris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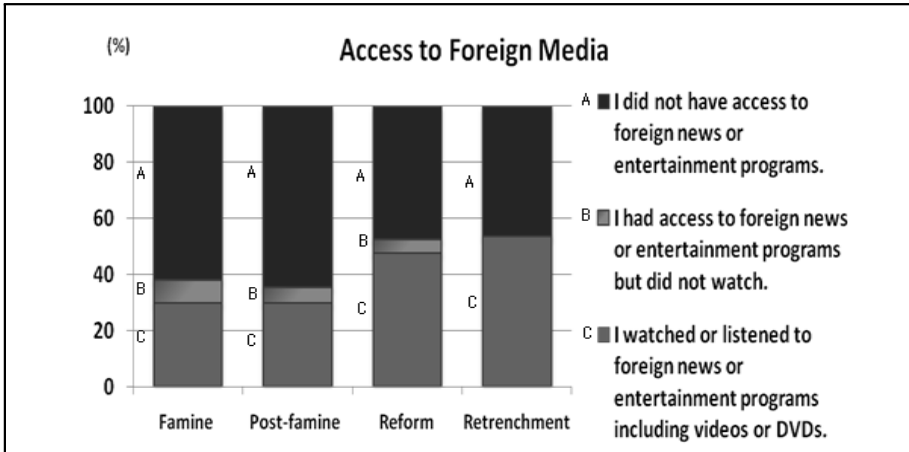
〈Figure 4〉



Now, this brings us to our third theme of increased access to foreign media and their increased consumption of it. Figure 5 shows the number of people who had access to foreign news and the number who consumed it. What we observe is that not only is consumption of foreign news rising, but inhibition against consuming it is disappearing. This is important because people who consume foreign news are associated with having more negative view or dissenting views of the regime. The regime's narrative that all of North Korea's problems are caused by hostile foreign forces is increasingly disbelieved by the population.

In our survey we ask a series of questions that could be considered political anthropology. We ask people: When you were in North Korea, among your friends, did you joke about conditions? Did you complain about conditions? Did you joke about the government?

〈Figur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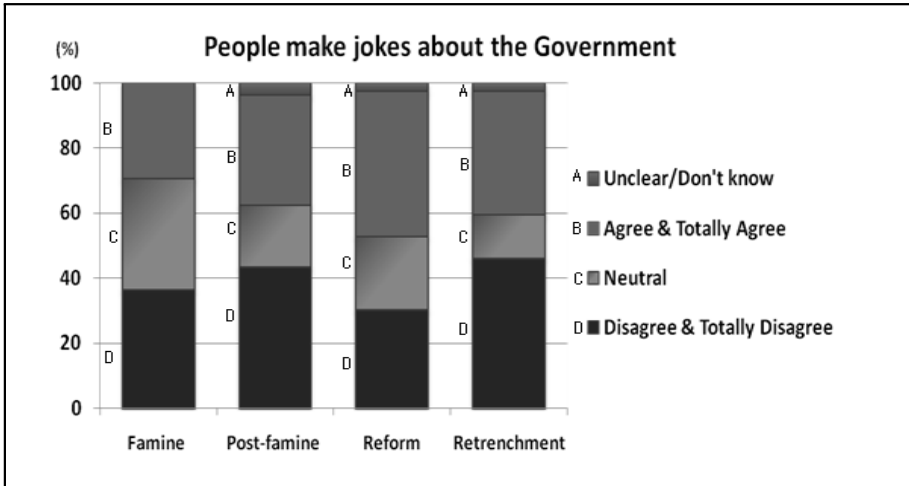


Did you complain about the government? Did you joke about Kim Jong-II? Did you complain about Kim Jong-II? Did you know people who were organizing against the government?

We start from just making jokes about the situation to people organizing to overthrow the government. What is striking about our results is that even among the self-selected group of refugees — people who have voted with their feet, who by definition have negative appraisals of the conditions in North Korea — a relatively small number report even making jokes about the government (see Figure 6). To me, this is an indication of how atomized this population remains.

We conclude that discontent is likely to be wide spread, but there appears to be a complete absence of civil society institutions capable of channeling that mass discontent into any kind of constructive

〈Figure 6〉



political action. This is where the market or the economic issues and the political issues meet. We find something that we labeled the market syndrome. I believe that the state on its own terms is right to fear the market. That explains the reluctance of the North Korean regime to embrace the economic reforms that would be necessary to rehabilitate the economy. We find that people who were involved in market activities are more likely to report political motives for departure. They are fifty percent more likely to have been arrested than their peers. They have even more negative views of the regime than the typical person in our sample, and critically, they are more likely to communicate those views to their peers.

The market is emerging not only as a mechanism of addressing the material depriv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but it is emerging as a semi-autonomous zone of social communication with a potential for political organizing. John Everard, who used to be the

United Kingdom's ambassador to Pyongyang, made a habit of going into markets. In principle he was not supposed to but he is a very charming guy and he speaks beautiful Korean. He would just go into these markets. Recently somebody asked John, "What are they talking about in the market?" and he said "Egypt."

Now, one last methodological issue then I will talk a bit about policy. Obviously, we interviewed refugees, these people voted with their feet. They left the country, they presumably have negative views. The question is, are these views representative of the resident population. We spend a lot of time and effort in the book trying to get at that question. Ultimately, we cannot completely answer it.

There may be unobservable characteristics that simply make them different. Their views may not be representative, but to the extent that we can, we control for every kind of identifiable characteristic, whether it be a demographic characteristic or life experience. We try to control statistically for every single characteristic that we can observe. When we do that, we cannot reject the proposition that their views are indeed representative of the remaining resident population in North Korea.

On what I would describe as the factual questions, we were interested a lot in household economics and so we asked them lots of question along the lines of, what share of their household income came from employment at the state owned enterprise, and what share came from unregulated market activity. For this kind of factual issue,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spondents and the counter-factual

projection onto the remaining resident population appear to be very slight.

When we ask opinion questions there may be more room for difference. It appears we may have over sampled groups or people with experiences that would lend them to have negative appraisals of the regime. However, the information we obtain from our sample group always fall within the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s. Obviously there is room for error in this work, but we think that what we are portraying is a reasonable portrayal of at least some significant share of the North Korean population and deserves to be taken seriously.

Well the book is based on refugee interviews, so refugees are important to us, but they simply represent the tip of the iceberg. They are only the visible part, 90 percent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 is below the surface, involving the people that remain in North Korea. So, what is to be done? We divide the policies up into policies to address the needs of the resident population, policies to address the needs of the refugees, and we have what we call direct policies that involve negotiating with North Korean government, sort of traditional diplomacy — requiring acquiescence or cooperation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en we have indirect policies, which are policies that do not require any assent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For example, in terms of the resident population we think information is very important.

Ultimately, we do not think that there is much that can be done

from the outside to change the fundamental nature of the North Korea political regime. However, what we can do is start to build, in North Korea, mechanisms for people to exert greater pressure on the regime to be accountable. The real tragedy in North Korea is that the regime has an almost untrammelled capacity for inflicting misery on its own population. What we want to do, is to begin to constrain that regime to act in a more responsible and accountable manner. Information and markets are two mechanisms that we can use to begin to constrain the regime. From the standpoint of outsiders, considering investing in North Korea, we might want to consider labor standards to make sure that the investors that go into North Korea are acting in a constructive way and not simply exploiting what amounts to virtual slave labor. In terms of refugees, in Table 1 I listed policies fo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but of course South Korea is also key.

〈Table 1〉 Human Rights Policy Matrix

Policies toward	Direct policies	Indirect policies
Resident popu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ficial dialogue • Penal system • Humanitarian relief • POWs/abductees • Family unification • Nonofficial exch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formation • Labor standards
Refuge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criminalize exit • Free repatriates • Enable determination 	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plement NKHRA • Support asylum seeking • Refugee scholarships Chi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ase forced repatriation • UNHCR access

What we argue for in the book is what we call “engagement with our eyes open.” That is to say, we think that it is important to engage with North Korea, but we also think it is very important not to have any delusions about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n regime or what that engagement may accomplish. In terms of economics, we see a hierarchy of forms of engagement starting with humanitarian aid, going through development assistance and ultimately commercial engagement. The last one, commercial engagement, will be absolutely critical. The financial and technical needs for rehabilitating the North Korean economy are so vast that you will not be able to do it working only through public sector institutions. It is going to need private sector involvement. Figuring out the best way to move forward on commercial engagement is a critical issue.

So, where does this leave us? As Doctor Nam mentioned, North Korea faces a looming succession. We believe that discontent is wide spread, but as I mentioned earlier there is an absence of civil society, or at least we do not see civil society institution, capable of channeling that mass discontent. There is no Solidarity trade union nor Catholic Church as there was in Poland that we can see. There is no Civic Forum as there was in Czechoslovakia. There is not even the role that Cardinal Sin played in the Philippines, of legitimizing dissent and the People Power Revolution against the Marcos regime. We see a complete absence of these institutions. I hope they are there, but we do not see them.

So, rather than any kind of organized opposition to the regime, what we see is what the sociologist, James C. Scott, described in

another context, as everyday forms of resistance. People are in effect dropping out of the system and trying to organize their lives in ways that do not involve high levels of entanglement with the state. However, as I mentioned earlier, the state is very intimately involved in people's lives through the criminal and penal system.

In this sense, we see the market as a zone of personal autonomy and freedom, and as outsiders we should be acting to try to strengthen the market as an institution in North Korea. Not only to address the material needs of the North Korean people, but to address broader humanitarian and social concerns as well. Ultimately, to use a Marxian formulation, we want to intensify the contradictions. We want to constrain what is effectively an unaccountable regime. And as I said earlier, to me that is the great tragedy of North Korea, that the political regime effectively has no accountability and that it can impose the worse sorts of misery on its people, with little capacity or mechanism within the system to correct those sorts of behaviors.

Questions & Answers

Q Many Koreans believe that China thinks of North Korea as a buffer zone against military aggression from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nd that they do not really want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this in mind, how ca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vince China that reunification will not damage Chinese security?

A Well, that is obviously a huge and important question. I believe that your fundamental premise is correct — China prefers a divided Korean Peninsula to a unified one. It likes having a fraternally allied socialist buffer state on its border. I believe beyond that, China, or at least some elements in China, find North Korea to be a useful pawn in China's rivalry with the United States and India. They can also have nuclear or missile cooperation with, say, Pakistan or Iran through North Korea, so that China does not have to get directly involved. Nevertheless, it creates heartburn for the United States and India, its two biggest geopolitical rivals. So, I believe that the Chinese preference would be to keep North Korea around. That is why China acts in ways that are very supportive of North Korea in terms of things like UN sanctions and so on.

So, what can South Korea do? It seems to me that South Korea needs to make it clear that North Korea has the potential to really destabilize Northeast Asia. North Korean nuclear activities put pressure on South Korea and Japan to strengthen their alliances with the

United States and to potentially develop nuclear capabilities of their own — something that is not in China's interests. If Japan and South Korea can develop nuclear capability, then Taiwan can as well again, this is not in China's interest. So, North Korea has the potential of not only strengthening this network of US alliances in Northeast Asia, but also of setting off a very real arms race with a set of wealthy technologically advanced countries. This is not in China's interest.

My own experience in China is that decision making is very stove-piped within China and that there is a strong generational component. So, there are people of, essentially, my father's generation who personally experienced the Korean War and have a personal or ideological affinity for North Korea, and they really do want to back the North Koreans. Then there are people who are essentially my age or younger. Many of whom had bad experiences themselves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period. They look at North Korea's cult of personality and hereditary succession with complete derision. For them they could accept unification of the peninsula on South Korean terms. They believe China has a perfectly prosperous and good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So, that is not the issue; the issue is the disposition of American troops. If you could work out a deal with the Chinese about how to handle an American troop presence after unification or the removal of American troops after unification, then I think there is a rising constituency in China that would accept that outcome. But that rising constituency is not the constituency that is in power today. So, today I expect China to continue its policy of effectively propping up North Korea.

Q Is there anything in your analysis concerning the concept or evaluation of the official ideology of *self-reliance* or *juche*.

A The simple answer is, no. We did not ask them about their views regarding *juche*. We did, however, ask them in both surveys about their hopes for the Korean Peninsula. We asked this in three ways. We asked them their preferred state of the Korean Peninsula today; their preferred state before they left North Korea; and their projection for what their friends want for the Korean Peninsula. The answers we get are basically consistent. There is overwhelming sentiment for unification. There is very little sentiment for a third way where North Korea would remain an independent state but have a regime change. As you can imagine with this population, there is virtually no sentiment for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That does not address the issue of *juche* directly, but it suggests that the people we interviewed did not have a strong attachment to either the current national ideology or the maintenance of North Korea as an independent state.

Q Of course, the North Korean regime is aware of the significance of the North Korean people engaging in market activities and their response has been to try to suppress marketization and market activities. What does this mean for the future of the North Korean economy or North Korea as a whole?

A This fear of the market is a profound difficulty for North Korea. In order to rehabilitate the economy they need the market, but they are afraid of the market. That is why since the late 1990's the state

has shown this ambivalence; two steps forward, one step back. I would say that basically North Korea wants to be modern and wants to be prosperous, but they want to do it on their own terms.

In some other work that I have been doing with Haggard we surveyed three hundred Chinese enterprises doing business in North Korea. What we find is that the bulk of this activity is done by decentralized profit seeking enterprises and they are undertaking this cross-border exchange on market conforming terms. They are there to make money, and if they cannot make money they pull out. North Koreans seem to want to suppress or eliminate these decentralized, market conforming forms of exchange and replace it with integration and exchange with China through mechanisms and entities that are strictly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I cannot say that I am enthusiastic for this sort of thing.

One of the things we find in the survey of Chinese businesses is that the Chinese do not trust the North Koreans. They regard the North Koreans as incredibly corrupt. For example, they are quite explicitly afraid in expropriation of assets. They are reluctant to invest; they would rather export to North Korea than invest and produce in North Korea. When they export to North Korea, they want the deal to be transacted in China so that they have recourse to whatever dispute resolution systems they have in China. The financing terms are very strict, and they want US dollars, Chinese Yuan, or barter. The North Korean regime wants to eliminate that kind of activity and channel it through entities that are strictly controlled by the state. I think this is a basic contradiction for the North Korean regime. I do not see

anything really changing as long as Kim Jong-Il is alive — he is too old and too invested in the system. I think when he dies North Korea is going to face a challenge in organizing a government. It will probably take that government some time to establish and consolidate political power and to start making changes — if they are interested in making changes. I see real change in North Korea to be some years off.

Q The Lee Myung-Bak government in South Korea has discontinued the Sunshine Policy, curtailing material and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How do you evaluate this policy change?

A President Kim Dae-Jung's conception of the Sunshine Policy was instrumental. It was aimed at changing or transforming the North Korean regime into a more prosperous and humane regime internally and into a regime with less bellicose external behavior. It seems to me that conception of engagement as an instrument to encourage the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 in desirable directions drifted to a very different policy under President Roh Moo-Hyun, which was engagement for engagement's sake. Engagement was seen as an end itself rather than an instrument to get to a certain goal. It is understandable that after ten years of engagement with very little to show for it the South Korean public wanted greater reciprocity. They wanted the North Koreans to show that they appreciated what South Korea was doing. One has to see President Lee Myung-Bak's election in that context.

Once he was elected he did two things that were understandable and

defensible, but could perhaps be regarded as contradictory by the North Koreans. One was he put on the table a plan to have per-capita income at \$3,000 at the same time he disavowed the commitment that his predecessor had made at the 2007 summit. Predictably, the North Koreans reacted negatively, for two reasons. Number one the free ride was over, South Korea was saying that they were willing to provide benefits, but the North would have to do something in return. Second the specific promises were no longer on the table. I thought the North Koreans would get over it and the two countries would start to converge towards a more constructive relationship. In another book, *Engaging North Korea: the Role of Economic State Craft*, which I wrote with Haggard is on exactly this topic of economic state craft. We reach the depressing conclusion that sanctions and inducement do not work very well with North Korea.

North Korea's behavior is fundamentally driven by internal political calculations; in particular succession is now a big issue. The outside world really has a limited ability to affect North Korean behavior. I do not see any major breakthroughs or changes, given the political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political situation in South Korea, and the political situation in North Korea.

Q Do business mafias or an equivalent exist in North Korea? If so, how influential are they on the maintenance of the regime and the economy?

A This question is actually very interesting. Over the last fifteen

or twenty years, the market in North Korea developed basically out of state failure. It was because of the state's inability to provide goods to the people; it was not because of any well thought out intended top down reform. That is one of the reasons why the state has never been comfortable with it. One aspect of the market's development, is that people who are part of the elite, either in the government or connected to the government,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market. For example, the wives of national security agency agents are important in the market. Also, there are people who are managing public distribution centers for food being involved in the food market.

One of the ways that change is happening, is that the elite themselves are becoming embroiled or entangled in the market and that may constrain the government's ability to take action against it. For example, during the 2009 currency reform, the North Koreans engaged in currency confiscation. The obvious response was going to be a rush into the black market to get foreign currencies. Indeed the value of the North Korean Won collapsed because everybody was trying to sell Won. The government decided to ban foreign currencies. I thought to myself and said in many interviews that there is absolutely no way that can happen. The military itself controls so many dollars there is no way you can ban the use of foreign currency. Will you have agents go to the generals' houses and take away their money? The government had to back off within a week.

The way the market developed is in a very unregulated and non-transparent way that has created a lot of relationships, which I don't think the regime itself understood. One of the things that

happened in December following the currency reform is that the prestige projects to build apartment building in Pyongyang had to be halted because of a shortage of cement. Why was there a shortage of cement? The construction firms that were building these apartments were state-owned construction firms, but they were procuring supplies in the market. So, when the markets collapsed, even the state-owned construction firms did not have access to cement. This must have been eye opening for some people in Pyongyang, that even their core state institutions had been compromised by this reliance on the market. I think that there is a kind of business mafia in North Korea and it will have a profound impact on how the economy is reformed moving forward.

Q How do you view Kim Jong-Il's visit to Russia? Does it signal that he is desperate for assistance from the outside?

A In my case, anything I say about Kim Jong-Il visiting Russia is going to be completely speculative in nature. I do not know if it is because he is desperate. It seems to me there are two things going on. One, Russia seems to be trying to create a more assertive diplomacy. Not just on the Korean Peninsula; for example the Russians have become very active in trying to reach some sort of solution to the situation in Libya. I think this should be viewed as part of a broader Russian attempt to reassert its influence in the world. On the North Korean side, it could be that he is desperate; it could be that he is trying to shore up support. There is the looming succession issue and he may be trying to get as good a deal as he

can for both North Korea and his successor. But, as I said, I have no particular knowledge of this situation. Those are just my guesses.

Q How can the discontent you mentioned be mobilized in order to bring about change in North Korea?

A I would say two things on the issue of mobilizing discontent. First, Information is critical and the more information we can get into North Korea the better. I do not mean propaganda or anti Kim Jong-Il tracts, just news of the world from unbiased sources of information. For example, North Korean official news accounts have said virtually nothing of the political revolutions happening in the Middle East. Indeed we hear reports that North Korean workers living in Libya have been told to stay where they are, because the regime is concerned what the workers will say when they come back to North Korea. So, information is critical.

Second, in terms of economic engagement, we want to engage with North Korea, but we also want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institutions that are not so tightly control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e want to support them because they may act in more economically efficient ways than institutions that are tightly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Also, we want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sources of power to the central government. In terms of encouraging mobiliz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information and the expansion of personal and institutional autonomy not controlled by the state is the best way to move forward. The internal dynamics

on the situation will begin to put greater and greater restraints on the regime's ability to behave in such an unaccountable and destructive way.

Q The North Korean regime gets very excited and the propaganda goes into overdrive every time conservative groups in South Korea send balloons over with propaganda and information leaflets. In your surveys, did you find that these activities have any effect at all? Do you think it is beneficial to flood North Korea with information and pamphlets?

A No, we did not really explore that. I think you would have to do more recent surveys. In an historical sense, that activity is quite recent. A lot of these people left in 2005, 2003, or 1999, so they were not exposed to that kind of thing. On whether it is a good idea or not, I think that in general the more information the better. I was quite surprised by the political sophistication of the groups using these balloons. I expected really crude anti-regime propaganda — obviously these people are quite opposed to the regime. We reproduced one of these pamphlets and you can read it on our blog and it is basically a short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over the last sixty years. I feel like it is actually a pretty fair rendering of how different groups have behaved and puts the Kim family and that regime into a certain political context.

From what I understand, what drove the North Koreans completely apoplectic were the descriptions of Kim Jong-II's personal life, and

the fact that the pamphlets told of his multiple consorts and his children by a variety of women. They even reproduced a kind of family tree. It was my understanding that it was that personal information that made the North Koreans crazy. I think there is room for providing fairly neutral information that would not be attacking the regime, that I think would be of interest to North Korean people and probably be constructive. It would be useful if the North Korean people could simply read a newspaper and see what is going on in the world—not an American or South Korean newspaper, but something like the *London Times*, *Le Monde*, or *El País*. Just knowing about prices in various places or knowing about the weather would be beneficial. I think there are lots of things that could be provided to the North Koreans that is not anti-regime propaganda, which would actually be very constructive.

I understand why people are uncomfortable with the activities of some of these groups, but my ultimate bottom line is one should err on the side of not controlling this activity. Likewise, if private groups want to provide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I think one should err on not interfering with that as well. It is private groups working with their own resources.

Q How do you evaluate the American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toward North Korea?

A Here is my very short and crude encapsulation of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When President Obama was elected, in his

inaugural address, he stuck out his hand to North Korea. North Korea's response was, within weeks, to engage in a nuclear test and missile tests. Also, President Obama came into office facing the worst economic crisis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Great Depression, while having to manage two wars, in Iraq and Afghanistan that had been bequeathed to him by his predecessor. He stuck out his hand towards North Korea, and they slapped him. If you are in his situation, are you going to spend much time trying to deal with the North Koreans? No, you are going to turn to other issues. Now we have this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and people are becoming impatient with the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There are specific calls for us to have direct talks with the North Koreans. In fact, Senator Kerry had an op-ed in the Los Angeles Times saying we should do this. Fine, it's always good to talk to people; I do not see how you can be hurt by talking to someone.

We have to recognize that the political context in the United States has changed. The political context is very much like the one in 1995. In October 1994,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signed the Agreed Framework. The following month in November 1994, the Republican Party, the opposition party, won the congressional elections and took control of the congress. The following year 1995-1996 in the run up to the November 1996 presidential elections, the Republicans used the North Korean issue as a cudgel to beat the Clinton administration. So, now we face a situation in which Republicans took control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n the last elections and Obama is going into a presidential election next year. He is going to be very reluctant to go out on a limb or risk any political capital

for the North Koreans, because he knows anything he does will be attacked by the Republicans in Congress — even something as simple as providing humanitarian aid. Congressmen are already attacking the possibilit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provide food aid to North Korea.

I think that basically, because of the political situation in South Korea, because of the political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 and because of the succession issue in North Korea, it is very unlikely to see any major breakthroughs over the next several years.

Q Your research shows a rising trend of corruption in North Korea. How do you interpret the rise in corruption and the stability of the regime?

A Corruption acts as a kind of safety valve. You do not have to pay your policemen or your local officials a full salary because they are out extracting bribes from the local population. It also means that the centrally organized political agenda and the parochial interests of the agents and official that are expected to carry out may begin to diverge. I will give you a very simple illustration.

North Hamgyong is kind of the rust belt of North Korea. The economy is very depressed, and because of its location and the relative narrowness of the Tumen River it is comparatively easy to get out of North Korea from North Hamgyong. So, former residents of North Hamgyong make up a substantial share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as well as those who have reached South Korea. Remittances from those people, back to North Hamgyong, are now a significant share of the economy in North Hamgyong. Unauthorized exit from North Korea is illegal, and coming to South Korea is traitorous and your family should be incarcerated in the political prison system. What I have heard, anecdotally, is that in North Hamgyong agents go to the homes of people with family members who have fled to South Korea and say, “I heard that your brother is now in South Korea, and I understand that he is sending money home to you. If you are willing to share, then everything will be ok.”

First of all, because of increased policing on the border the transaction costs of sending money from South Korea to North Hamgyong has really gone up. Additionally, fifty percent is now being creamed off by the officials in North Hamgyong, but on the other hand people do not go to the gulag. So, this illustrates that although the central government may want those people to go to the gulag, the local officials are making money off this kind of corruption. It acts as a safety valve but it also creates a fraying of the actual instrument of control and that could not make the central government very comfortable.

One of the things we observe is an attempt by the Chinese to centralize their economic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in order to get around the issue of every North Korean sticking their hand out for corruption. At the same time by centralizing it you centralize the corruption. When you look at the membership of these committees it is basically a map to the internal political economy of North Korea. You see which groups and individuals are influential and which groups are

going to be able to extract the money from the Chinese investors coming in.

Q How do you see the future of North Korea? Could North Koreans have their own Jasmine Revolution if they had greater access to information and civil society institutions? Do you foresee Korean unification in the near future, if at all?

A I do foresee unification in my lifetime, and certainly within the next generation's. As for a Jasmine Revolution, the answer is no. Due to the nature of North Korea it is less likely to look like the Jasmine Revolution or the collapse of East Germany, and more like the Romania Revolution on steroids. It will be bloody and there will be people shooting people in the streets. If there is abrupt change, I see intra-elite fighting playing an important role and a variety of security and military agencies will be settling scores with each other. That is why when I look at the potential outcomes in the North, the East German case looks really good. There was not mass violence, nobody got hurt, and there were no loose nukes. Which is why, if I were a South Korean, I would go to bed every night praying for it. I think the actual outcome, if there is abrupt change, is likely to be much bloodier. The real risk of course is that one or more faction will appeal to either South Korea or China for support. The introduction of foreign forces into that kind of situation could really raise the stakes. Eventually, we will get towards unification, but it will be a very bumpy road.

Q How can one believe what the refugees are saying about the abuses they say they witnessed in the prison system? Maybe, they are just saying what they think we want to hear.

A We are very concerned about that. So, when we did our analysis we ask a hierarchy of questions. We asked the prisoners, when you were in prison did you see prisoners being beaten? The affirmative response rate was almost one hundred percent. My guess is that if you went to a local prison here in South Korea or if you went to the Washington DC city jail and asked if the prisoners had ever seen a prisoner beaten, probably a lot of them would say yes. If you go to any prison in the world and ask prisoners if they ever saw a prisoner beaten, lots of prisoners would say yes. Then we asked if they had ever seen a public execution, and a disturbing number of prisoners responded affirmatively, but it was a much lower number, maybe fifty percent.

We went through these various forms of abuse until we got to the issue of forced abortions and infanticide practiced against women who were pregnant at the time they were repatriated from China. In the China survey, the share of people who said they had firsthand knowledge of this was six percent, much lower, as one would expect. In the South Korea survey the share of respondents saying they had firsthand knowledge of this phenomenon was seven percent. So, you had both within the hierarchy of abuses a plausible pattern of narrowing and you had the numbers lining up from two surveys. This leads one to believe that something is really happening. Then we observed that within the North Korean legal system infanticide of these children

was made illegal. Now it is allegedly continuing to occur, but we could observe the fact that this was now made a crime in the legal code, which suggests that implicitly it must have been going on.

One of the interesting things about looking at the North Korean legal code is to see how it evolves. It implicitly tells us what things are going on. When we look at the legal code we see all sorts of things being made illegal. Selling precious metals, well, somebody must have been doing if they made it illegal to do so. The one I find curious is that in one legal code change they made operating a prostitution ring out of a hotel or restaurant a crime and in a subsequent revision they made it a capital crime. You can now be executed for pimping in North Korea. This may be a good or bad thing; I will leave that up to you to decide.

북한의 시장과 경제,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Marcus Noland

오늘 강연에서는 내가 Stephen Haggard 교수(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Diego)와 공동 집필하여 올해 초에 발간한 ‘*Witness the Transformation: Refugee Insights into North Korea*’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말하고자 한다. 이 책은 북한 난민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설문조사가 한 번은 중국에서, 다른 한 번은 한국에서 실시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나는 한국에 와있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2005년에 중국에서 실시되었던 첫 번째 설문조사는 1,6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던 당시의 여건으로 인해, 조사의 질은 현대의 사회과학적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당시 설문조사의 문제는, 우리가 인터뷰했던 사람들이 사실상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조사가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했다는 점이다.

2008년에 300명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실시되었던 두 번째 설문조사는 법률적 여건이 훨씬 더 튼튼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많은 질문과 한층 더 실감나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설문조사에서 얻은 결과가 앞서 중국에서 있었던 조사와 잘 연결이 되었고, 또 두 조사의 내용이 서로 보강되는 것으

* 이 글은 2011년 6월 29일 개최된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의 내용을 녹취하여 번역·정리한 것으로 필자의 개인 의견임을 밝혀둔다.

로 나타나 우리는 매우 만족스러웠다. 오늘 강연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결과의 대부분은 사실상 한국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조사에서 나온 것들이다.

북한 난민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인간으로서의 난민에 대한 관심이며, 그들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인도주의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북한 내부여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오늘 강연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북한 난민, 그들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그들이 북한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몸담고 있으면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일을 하고 있는 만큼, “과연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책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두 설문조사에서 표본 응답자들의 기본적인 인적구조에는 약간 차이가 있었다. 중국에서 시행된 조사에서는 남녀의 성비가 대략 동등하게 나타났다. 한국에서 진행된 조사에서는 현재 한국에 정착한 난민(탈북자) 인구 중에 여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연령대는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렀지만,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한창 일할 수 있는 30~40대 연령층이었다. 지리적으로, 응답자들은 함경남북도 출신이 우세한 가운데 북한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는데, 이는 탈북자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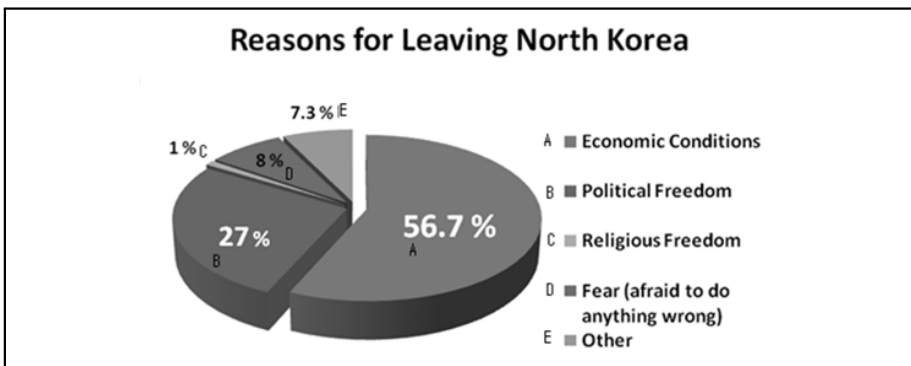
두 조사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던 부분 중 하나는 교육수준이다. 한국에서 실시된 조사의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였다. 중국에서 시행된 조사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이 조사에서 당면했

던 기본적인 방법론적 이슈 중 하나는, 우리가 난민들에게 질문을 하면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그들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응답자들이 자신의 학력을 과장한다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부분이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설문조사에서 상당히 많은 응답자들이 자신의 교육수준이 매우 낮다고 대답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는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의 교육수준에 대해서 주장한 것과는 모순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탈북자 자신들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 세대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서 충격적인 점은, 있어야 할 세대간의 사회적·경제적 이동성이 북한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농부였으면 자식도 농부이다. 아버지가 노동자였으면 자식 역시 노동자이다. 교육수준에 있어서 약간의 상향 움직임이 있었고, 북한 주민 전체가 부모 세대에 비해 좀 더 나은 교육을 받는 추세이지만, 사회적·경제적 이동성이나 직업적 이동성은 사실상 매우 경미하다.

우리는 두 설문조사에서 북한 난민들에게 북한을 떠난 이유에 대해

〈그림 1〉



물어보았다. 중국에서 실시된 조사의 경우, 그들은 압도적으로 경제적 동기를 이유로 들었다. 한국에서 실시된 조사의 경우는 다수가 경제적 이유를 든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표본응답자의 1/4 이상이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을 떠났다고 응답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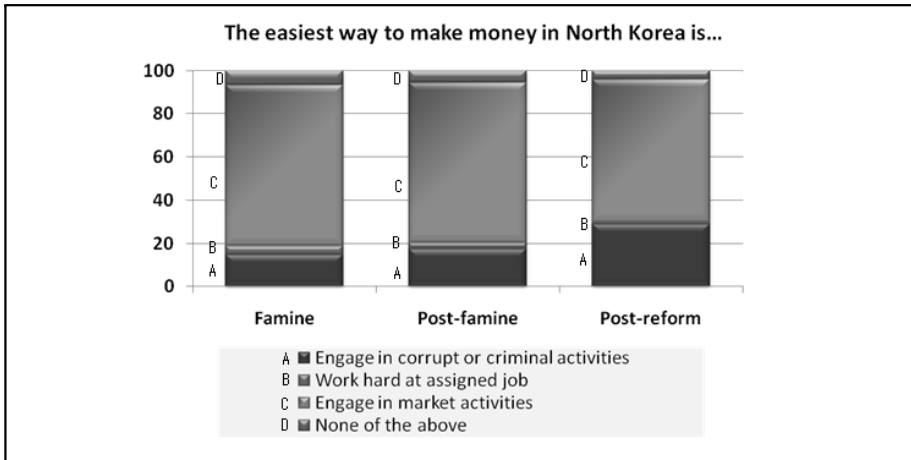
우리가 중국에서 조사를 진행했을 때 공동연구자들 중 한 명이 심리학자였다. 그래서 응답자들의 심리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와 관계된 질문들이 많았다. 임상적 배경에서 볼 때, 우리가 인터뷰했던 사람들의 절반 또는 그 이상에게 아마 역경 후에 나타나는 스트레스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진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한국에서 심리학자들과 의학박사들이 편찬한 임상문헌에서는, 북한 난민들 사이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자료를 분석해 볼 때, 이러한 문제들은 북한과 중국(그들이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대부분 거치는 곳이다)에서 겪었던 일들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다.

1990년대의 기근이 여전히 북한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약 1/3이 기근 당시에 가족이 죽거나, 가족과 헤어졌다고 응답했다. 우리가 알아낸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매우 많은 응답자들이 그들이 북한에 있을 때 국제적인 식량원조활동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으로 답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대다수는 개인적으로 식량원조의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식량의 대부분이 군이나 고위 공직자들에게 갔다고 믿는다. 이는 그러한 일들을 사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응답자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식량원조에 대해서는 알았으나 자신은 수혜자라고 믿지 않는 그룹에 속해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하게 의기소침해지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마치 자신이 어려운 시기에 버림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하며, 심리상태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느낀다(통계적 관

점에서 보면, 심지어 감옥에 감금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 난민들이 관심을 끄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정보가 제한된 환경에 있는 북한에 대해서 창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북한 내에 있는 개개인들에 대해서 시간적 추적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응답자들을 시기별로 계층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2> 및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을 떠난 시기에 따라 응답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기근 시기(~1998년), 기근 이후 시기(1999~2002년), 개혁 이후 시기(2003년~)로 정했다. 각 그룹은 전체 표본 응답자들의 1/3 정도로 대략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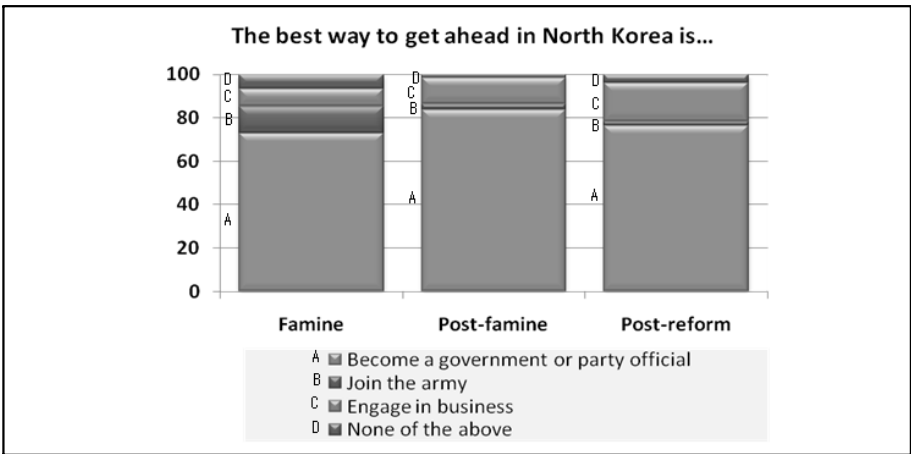
<그림 2>



북한에서 돈을 가장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애석하게도, 자신에게 부여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북한에서 그다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으며 최근에는 그것마저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그림

2>에서 충격적인 것은, 가장 쉽게 돈 버는 방법이 부정부패나 범죄행위라는 대답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북한에서 출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군대는 출세할 수 있는 방법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내가 이러한 정보를 워싱턴에서 발표하자, 사람들은 “잠깐, 북한은 선군정치를 하지 않는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래서 나는 “선군정치가 장군에게는 매우 좋을지 모르겠지만, 징집병이 출세하는데 있어서는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대답했다. <그림 3>에서 놀라운 점은 여전히 많은 응답자들이 당과 정부를 출세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앞의 두 결과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응답자들을 나누어, 북한에 있을 당시 정부나 당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졌었다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들은 동료들 사이에서 부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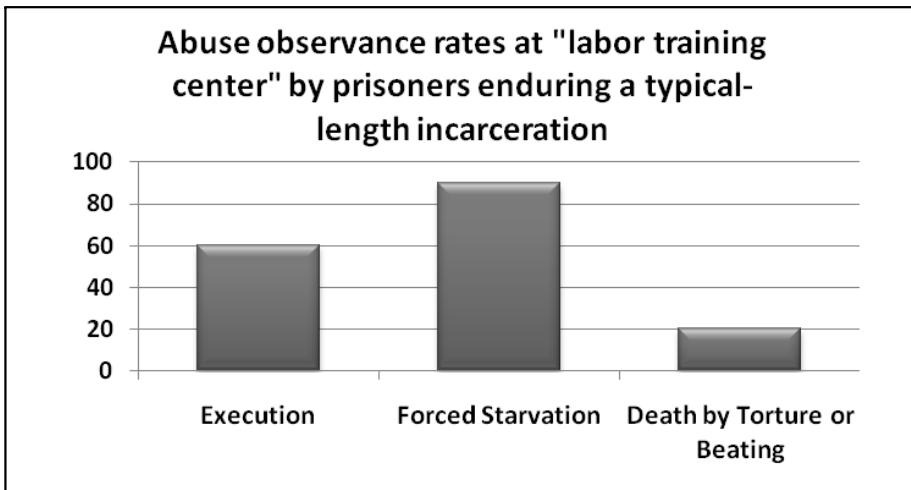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또한 직장에서 사상주입교육에 쏟는 시간도 점점 늘어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중앙 당국이 북한 시스템 전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자신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알고, 국가와 당 간부들의 사상적 충성심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성장산업이며, 여전히 국가가 출세의 지름길로 남아 있다는 근본적인 결과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기대했던 바는 아니었으나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경제활동을 범죄시하여 이에 가하는 법적 체제 수준이다. 북한의 법규가 바뀌어 경제범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북한에서 엘리트층에 속하지 않는 전형적인 일반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법규들 중 적어도 한 가지를 위반하게 되어 있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북한 주민 모두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북한 경찰은 범죄자의 체포·구금에 관한 특별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구금시설의 환경은 끔찍할 정도이다. 이러한 것이 뇌물갈취의 완벽한 수단이 되고 있다. 북한 경찰은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찾아가 체포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들을 학대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구금시설에 구금할 수 있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은 자신과 가족이 그러한 시스템에 얽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기꺼이 뇌물을 주고 싶어 한다. 간단히 말해, 북한의 형벌시스템의 역할이 정치적 억압의 집행이라는 전통적인 것으로부터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수탈의 발판이 되는 것으로 확대된 것이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시장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체포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5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체포된 적이 있는 주민들에게, 투옥되기 전에 어떠한 형태의 정식 절차나 재판 같은 것을 받았었는지 질문하였더니 응답자의 12%만이 받았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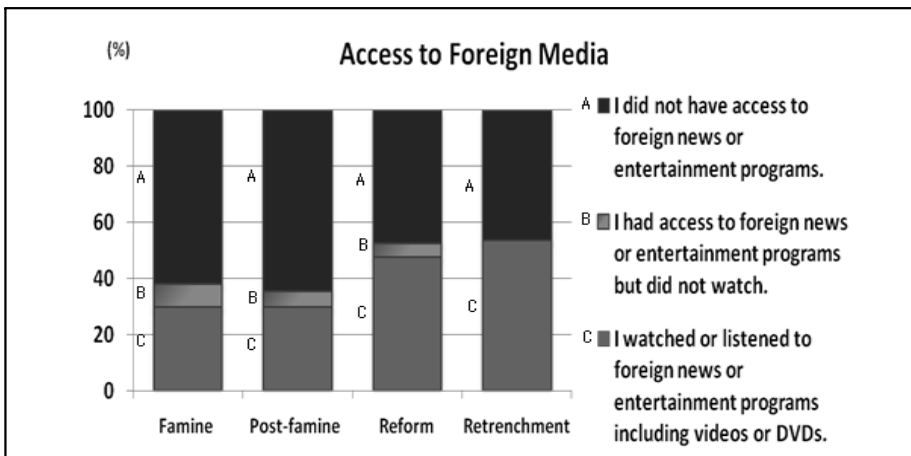
대답했다. 북한에는 실제로 4단계의 형벌시설이 있다. 즉, 경범죄유치장, 중범죄교도소, 정치범수용소, 그리고 이른바 노동교화소가 그것이다. 노동교화소는 1990년대에 기근을 겪고 난 후 생긴 새로운 형태로써, 실제 법률로 성문화되어 있는 수용시설이다. 이 노동교화소에는 많은 경제범죄자들이 수용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교화소, 유치장, 교도소, 그리고 정치범수용소의 순으로 학대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찰해 보니 실제로 그랬다. 정말 충격적인 점은 학대행위의 증가하는 정도가 완만하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교화소와 유치장에 구금 또는 투옥되는 기간이 정치범 강제수용소에서보다 짧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노동교화소에 구금되는 사람의 일반적인 구금기간이 수 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이 학대행위를 당하는 것을 목격할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높다(그림 4 참조). 북한의 수용시스템 내에는 이와 같은 학대행위가 만연해 있으며, 그것은 열악한 정치범수용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림 4〉



다음으로, 세 번째 주제인 외국대중매체에 대한 접촉 및 이의 소비 증가추세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그림 5>는 외국 대중매체에 접촉하는 사람들과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수를 나타낸다.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외부소식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금지하는 것도 사라져가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외부소식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북한 정권에 대해 보다 부정적이거나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는 것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모든 문제가 적대적인 외세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는 북한 정권을 북한 주민들은 점점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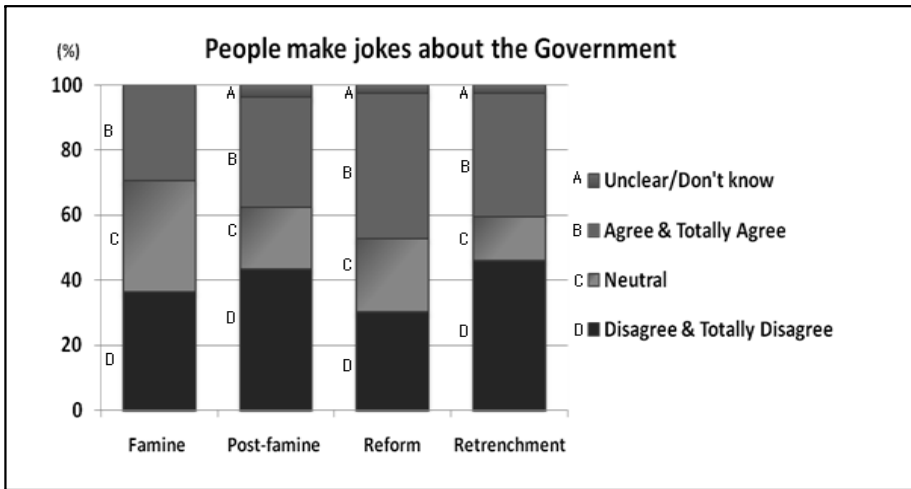


우리는 설문조사에서 정치인류학에 관한 일련의 질문들을 하였다. 질문항목은 “북한에 있을 때 친구들과 북한의 상황에 대해 농담을 한 적이 있는가?” “북한의 상황에 대해 불평한 적이 있는가?” “정부와 관련된 농담을 한 적이 있는가?” “정부에 대해 불평한 적이 있는가?” “김정일에 대해서 농담을 한 적이 있는가?” “김정일에 대해서 불평을 한 적이 있는가?” “조직적으로 정부에 대항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

는가?” 라는 것들이었다.

우리는 단순히 상황에 대한 농담에서 시작하여 북한 정부를 타도하기 위해 조직화하는 사람들에 관한 질문까지 했다. 설문결과에서 놀라웠던 점은 스스로 난민대열을 선택한 사람들(이들은 자기 발로 난민대열에 들어선 사람들로서, 당연히 북한의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사이에서조차 북한 정부에 대한 농담을 한 경우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림 6>은 이 질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6>



우리는,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은 만연해 있는 것 같은데 대중들의 불만을 일종의 건설적인 정치적 행동으로 연결해주는 시민사회단체가 완전히 실종상태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한 곳이 바로 시장이며, 경제적 이슈가 정치이슈와 만나는 곳이다. 우리는 시장신드롬이라 불리는 어떤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북한 정권이 그들 자신을

위해서 시장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믿는다. 이는 북한 정권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경제개혁을 수용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시장활동에 참여해 보았던 사람들이 정치적 동기로 탈북할 개연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체포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50% 더 많았다. 그들은 이번 조사대상 중의 일반적인 북한주민들보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 훨씬 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러한 부정적 시각을 주위의 동료들과 함께 나눌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다.

시장은 북한 주민들의 물질적 부족을 해결해주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서일 뿐만 아니라, 정치조직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사회적 소통의 반(半)자치구역으로써 떠오르고 있다. 평양 주재 영국대사로 있었던 John Everard는 북한에서 시장을 방문하는 습관이 있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는 아주 멋진 사람으로 한국어를 매우 잘 구사했다. 그는 단순히 시장을 방문하고자 했던 것이다. 최근에 누군가가 John에게 “사람들이 시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라고 묻자, 그는 “이집트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라고 답했다.

이제, 한 가지 마지막 방법론적인 이슈에 대해 언급한 다음 정책적인 부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한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터뷰했던 북한 난민들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그들이 북한을 떠난 것은 아마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이들의 견해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했지만, 결국 우리는 이에 대한 완전한 답을 구하지는 못했다.

관찰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차별화할 수 있는 특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견해가 대표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구통계학 특성이나 삶의 경험 등 규명할 수 있는 모든 특성을 고려하였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개별 특성들을 통계학적으로 고려하고자 노력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시각이 실제로 현재 북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표한다는 명제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에 입각한 문제들을 서술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계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국영기업에서 일함으로써 얻는 수입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제를 받지 않는 시장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하는 등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적 이슈들에 있어서, 나머지 북한 주민들에 대하여 해본 반사실적 추정 결과와 응답자들로부터 얻은 결과는 그 차이가 매우 근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에는 더 큰 차이를 보일 여지가 있다. 이는 우리가 과도하게 편중된 표본그룹을 설정하였거나, 북한 정권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표본그룹에 너무 많이 넣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가 표본그룹으로부터 얻은 정보는 항상 95%의 신뢰구간 범위 안에 있다. 이 조사에서 오차가 있을 여지는 분명 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도출한 내용들은 상당부분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합리적으로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책은 난민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따라서 북한 난민들은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것들은 오직 가시적인 부분에 불과하며, 북한에 남아 있

는 사람들을 고려할 때 북한 인권문제의 90%는 수면 아래에 숨어 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책들을 북한 내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북한 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나누어 본다. 그리고 북한 정부의 목인내지는 협조가 필요한 일종의 전통외교에서와 같이 북한 정부와의 협상이 요구되는 직접적 정책과, 북한 정부의 승인이 전혀 필요 없는 간접적 정책을 생각해본다. 예를 들어, 북한 내 주민들의 측면에서는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궁극적으로, 외부에서 북한 정치체제의 본질을 변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책임감을 가지도록 주민들이 큰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북한 내에 만들기 시작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다. 북한의 진정한 비극은 북한 정권이 거의 아무런 제약 없이 자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북한 정권이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제약을 가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정보와 시장은 북한 정권을 제약하기 위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다. 외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에 대한 투자를 고려한다는 것은, 북한에 진출한 투자자들이 건설적인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장하는 노동기준을 엄두에 둔 것이지, 단순히 거의 노예수준에 다름없는 노동력을 이용하고자 함은 아닐 것이다. 북한 난민의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표 1>로 만들어 보았다. 물론 한국 역시 중요하다.

이 책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른바 “방심하지 않으면서 관계를 맺는 것(engagement with our eyes open)”이다. 즉, 북한과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정권의 본질이나 이러한 관계가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대해서 어떠한 환상도 갖지 않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관계개선의 단계를

인도적 원조에서 시작하여, 개발지원 단계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는 상업적 관계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상업적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북한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기관들만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며,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상업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가? 남중현 원장께서 언급하셨듯이, 북한은 권력승계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북한 내에 불만이 널리 확산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에는 이렇게 팽배한 대중들의 불만을 풀어낼 수 있는 시민사회가 없거나, 적어도 우리가 시민사회기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없다. 북한에는 폴란드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자유노조연대(Solidarity)나 천주교

〈표 1〉 Human Rights Policy Matrix

Policies toward	Direct policies	Indirect policies
Resident popu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ficial dialogue • Penal system • Humanitarian relief • POWs/abductees • Family unification • Nonofficial exch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formation • Labor standards
Refuge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criminalize exit • Free repatriates • Enable determination 	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plement NKHRA • Support asylum seeking • Refugee scholarships Chi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ase forced repatriation • UNHCR access

회가 없다. 체코슬로바키아에 있었던 시민포럼(Civic Forum) 같은 것도 없다. 심지어 필리핀에서 Marcos 정권에 대항하는 합법적 반대운동과 시민혁명을 주도했던 Cardinal Sin 대주교의 역할을 하는 사람조차 없다. 우리는 북한에 이러한 기구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기구들이 북한에 있기를 바라지만 찾아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북한 정권에 대한 어떤 조직화된 저항보다는 사회학자인 James C. Scott이 또 다른 맥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상 속에서의 저항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실제로 시스템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국가와 최대한 얽히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북한 정권은 범죄 및 형사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의 삶에 매우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시장을 개인의 자율과 자유의 지역으로 본다. 그리고 외부인으로서 우리는 시장을 북한 내부의 기구로 강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물질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인도적·사회적 관심사들을 폭넓게 다루기 위함이기도 하다. 결국, 마르크스주의적 표현을 사용하자면, 우리는 모순이 더 커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책임감이 없는 북한 정권을 제약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체제가 실질적으로 책임감이 없으며, 이러한 체제가 온갖 형태의 엄청난 고통을 북한 주민들에게 안겨 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을 능력이나 메커니즘이 북한 체제 내에는 전혀 없다는 점이 나에게서는 실로 엄청난 비극으로 보인다.

질의·응답

질문 많은 한국인들은, 중국이 북한을 미국 및 한국의 군사공격에 대한 원충지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면 중국에 대해 한반도 통일이 중국 안보에 손상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킬 수 있겠는가?

답변 이는 분명히 크고 중요한 문제이다. 나는 귀하의 근본적인 전제는 옳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통일된 한반도보다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를 선호하며, 우애적인 사회주의 동맹국을 자국 국경에 완충지대로 두고 싶어한다. 나는 그 외에 중국 또는 최소한 중국 내 일부 부류들은 북한을 중국과 미국/인도와의 대립관계에 있어서도 하나의 유용한 카드로 간주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북한을 통해서 파키스탄이나 이란 같은 나라들과 핵무기나 미사일에 관한 협력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지정학적 양대 경쟁국인 미국과 인도의 속을 썩히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중국이 북한을 곁에 두고 싶어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UN제재 등의 문제에 있어서 북한에게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나는 한국이, 북한은 정말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의 핵 활동은 한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시키고, 이들 양국의 잠재적 핵 역량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이는 중국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일 것이다. 만일 한국과 일본이 핵 역량을 키운다면, 대만이라고 핵 역량을 왜 키우지 않겠는가? 이 또한 중국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동맹국들 간의 네트워크

를 더욱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단의 부유한 기술선진국들을 진정한 군비경쟁에 돌입시킬 잠재력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도 중국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는 일이다.

중국에서의 내 경험으로 볼 때, 중국 내의 의사결정은 매우 수직적이며 세대 간의 요소가 매우 강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보통 나의 아버지 세대의 중국인들은 한국전쟁을 겪었고, 북한에 대해 개인적으로 또는 사상적으로 친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진정으로 도와주고 싶어한다. 그리고 보통 내 나이 및 젊은 세대의 중국인들은 대부분 문화혁명 시기의 좋지 않은 경험을 갖고 있으며, 그들은 북한의 개인숭배와 세습적 권력승계를 완전히 조롱하면서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들은 중국과 한국이 더할 나위 없이 번영적이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미군의 한국 주둔이다. 만약 통일 이후 한반도 내 미군의 주둔 또는 철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하여 중국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나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받아들이는 지지층이 중국 내에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이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계층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중국이 사실상 북한을 지원하는 정책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질문 주체사상의 공식적 이념(official ideology)에 대한 개념이나 평가와 관련하여 귀하가 분석한 것이 있는가?

답변 간단하게 대답하면 “no”이다. 우리는 난민들에게 주체사상에 관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양쪽 모두의 설문조사에서 한반도에 대한 그들의 기대에 관하여 물어보았다. 우리는 이 질문을 세 가지 방

식으로 하였다. 즉, 지금 현재 그들이 바라고 있는 한반도의 상태는 무엇인지, 그들이 북한을 떠나기 전에 바랐던 한반도의 상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친지들이 앞으로 원하는 한반도의 상태는 무엇인지가 바로 그 세가지 질문이다. 우리가 얻은 응답은 기본적으로 일관성이 있었으며, 통일을 바라는 정서가 압도적이었다. 북한이 독립국가로 존속 하되 정권은 바뀌어야 한다는 제3의 방식에 대한 선호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응답자들에게 예상될 수 있듯이 현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정서는 사실상 이들에게 없었다. 이와 같은 것이 주체사상의 이슈를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터뷰했던 사람들은 현재의 북한 국가이념이나 북한이 독립국으로써 유지되는 것에 대하여 큰 애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문 물론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이 시장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시장화나 시장활동을 억누르고자 애쓰고 있다. 이는 앞으로의 북한경제 또는 북한 전반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답변 시장에 대한 두려움은 북한에 있어 엄청난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북한은 시장을 필요로 하지만, 그들은 시장을 두려워하고 있다. 북한이 1990년 말 이후부터 ‘2보 전진 1보 후퇴’와 같은 양면적 행동을 보여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현대화를 이루어 잘 살고 싶어하지만, 자신들만의 방식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다.

나와 Haggard 교수가 하고 있는 다른 공동연구에서 우리는 북한과 사업을 하고 있는 300여 개의 중국기업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다. 우리는 이 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업활동의 대부분이 분권화되어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들은 시장부합적 방식에 따

라 국경거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돈을 벌지 못하면 철수한다. 북한은 이와 같이 분권화되고 시장부합적인 거래형태를 억압하거나 없애고, 그대신 이를 통합하여, 정부가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 및 기구를 통해서 중국과 거래하도록 바꾸고 싶어한다. 나는 이러한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기업들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것 중 하나는 중국인들이 북한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인들은 북한사람들이 매우 부패하였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중국인들은 그들의 재산이 몰수당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은 북한에 투자하기를 꺼려한다. 중국인들은 북한에 투자하여 생산을 하기보다는 북한에 수출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그들이 북한사람들에게 수출할 때에는 중국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는 유사시 중국의 분쟁해결시스템에 의존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대금결제 방식도 매우 엄격하여, 그들은 미국 달러화, 중국 위안화, 또는 물물교환방식으로 거래하기를 원한다. 북한 정권은 이러한 종류의 활동을 없애고 국가에 의해 엄격히 통제 받는 기구를 통해 교류하기를 원한다. 나는 이러한 점이, 북한 정권이 안고 있는 기본적인 모순인 것으로 생각하며, 김정일이 살아 있는 한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 김정일은 나이가 너무 많고 이러한 북한 시스템에 이미 너무 많이 젖어 있다. 그래서 나는 김정일이 사망할 경우 북한은 정부를 재조직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새 정부가 권력을 장악하여 이를 굳히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이는 북한이 변화에 관심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북한 내부의 진정한 변화는 앞으로 여러 해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질문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햇볕정책을 중단하고, 물질적,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축소시키고 있다. 귀하는 이러한 정책변화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답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개념은 중요했다. 햇볕정책의 목적은 내부적으로는 북한 정권을 보다 번영되고, 인도주의적인 정권으로 변모시키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덜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권으로 변화 또는 전환시키고자 함이었다. 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북한을 전환시키려는 수단으로 사용된 포용정책의 개념이, 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단순히 ‘포용을 위한 포용’이라는 매우 다른 정책으로 표류하는 것을 보았다. 즉, 포용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보였다는 말이다. 포용정책을 실시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이 원했던 호혜주의의 확대는 별로 없었다는 점은 이해할 만하다. 한국 국민들은 한국이 했던 일에 대해서 북한이 고맙게 생각해주시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봐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후, 두 가지 조치를 취했다. 그 조치는 납득할 만한 것이며 논리적으로도 맞는 것들이었으나, 북한은 이를 모순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1인당 소득을 3,000달러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동시에 전직 대통령이 2007년 정상회의에서 했던 약속을 부인했던 것이다. 예상대로 북한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첫째는 공짜로 주는 것은 끝났다는 것이다. 즉, 한국은 북한에 기꺼이 혜택을 제공하겠지만 북한도 보답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약속이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북한이 이를 극복하고, 남·북이 보다 건설적인 관계로 수렴될 것이라 생각했다. 내가 Haggard 교수와 공동 저술한 또 다른 책인 *Engaging North Korea: the Role of Economic State Craft*에서는 제목 그대로

경제적인 국정운영을 주제로 하고 있다. 우리는 제재나 유인책이 북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큰 효과가 없다는 우울한 결론에 도달했다.

북한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북한 내부의 정치적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며, 특히 지금은 권력승계가 큰 이슈이다. 외부세계가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사실상 제한적이다. 미국의 정치적 상황, 한국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북한의 정치적인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나로서는 어떤 획기적인 돌파구나 변화를 찾아 보기가 어렵다.

질문 북한에 비즈니스 마피아 또는 그와 비슷한 것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마피아의 존재가 북한 정권과 경제가 지속되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는가?

답변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다. 지난 15~20년간 북한의 시장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실패로 인하여 발전되었다. 이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물품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잘 구상하여 시도된 하향식 개혁 때문이 아니었다. 이러한 것이 국가가 결코 시장을 편안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시장발전의 단면 중 하나는, 정부 또는 정부와 관계된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례로, 국가보위부 간부의 부인들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공공식량배급소 관리자가 식품시장에 참여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 예이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방식들 중에 하나는, 엘리트층들 스스로가 시장에 맡겨있거나 얽혀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대해 억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09년도의 화폐개혁 당시 북한 주민들은 화폐를 몰수당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외화를 구하기 위해 암시장으로 몰려들 것이다. 모두가 북한 원화를 팔

려고 했기 때문에 북한 화폐의 가치가 폭락했다. 그러자 북한 정부는 외화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내가 많은 인터뷰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절대 있었을 수 없는 일이다. 군대 자체가 상당히 많은 금액의 달러를 관리하고 있어서 외화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기관원들이 장군들 집에 들어가 그들의 돈을 빼앗을 수 있겠는가? 정부는 일주일도 안되어서 포기해야 했다.

북한 시장은 거의 규제되지 않고 불투명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많은 관계들을 만들어가면서 발전하여 왔는데, 북한 정권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폐개혁 이후 그 해 12월에 있었던 일들 중 하나는 평양 시내에 아파트를 건축하려던 강성대국 프로젝트 (prestige projects)가 시멘트 부족으로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왜 시멘트가 부족하게 되었을까? 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기업은 국영기업이었지만 건축자재를 시장에서 조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장이 붕괴되자 국영건설사마저도 시멘트를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핵심 국영기업들조차도 시장에 의존함으로써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일부 평양 사람들에게 분명히 깨우쳐주었을 것이다. 나는 북한에도 일종의 비즈니스 마피아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앞으로 북한 경제의 개혁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질문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는 김정일이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신호인가?

답변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내가 말하는 것은 모두 사실상 추측에 불과할 것이다. 그것이 원조를 간절히 필요로 해서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내가 보기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는, 러시아가 보다 적극적인 외교관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

이다. 이는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가 리비아 사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러시아가 세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시도하는 여러 가지 노력 중 하나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측면에서 보면, 이는 김정일이 사정이 절박해졌기 때문에 러시아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다가오는 권력승계 문제도 있으므로, 북한과 자신의 후계자 양쪽 모두를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거래를 하고자 함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나는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특별히 아는 것이 없으며 모두 나의 추측일 뿐이다.

질문 귀하가 말했던 주민들의 불만을 북한 내부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답변 불만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첫째, 정보가 아주 중요하다. 북한에 들어가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 꼭 선전 또는 반(反) 김정일 전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지 않은 정보원로부터 나오는 세계 소식이면 된다. 예를 들면, 북한의 공영뉴스는 중동에서 일어난 정치혁명에 대해 사실상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들은 바에 의하면, 리비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리비아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라고 한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은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올 경우 무슨 말을 할지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경제적 협력의 측면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협력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중앙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않는 기구들의 발전을 위한 지원 역시 원한다. 우리가 이러한 기구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들이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기구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중앙정부의 힘을 대체할 수 있는 근원을 개발하라고 권하고 싶다. 북한 주민들의 동원을 고무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개인 및 기구의 자율성 확대와 정보는 상황진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북한 상황에 대한 북한 내부의 역동성은 지금처럼 책임감 없고 파괴적인 방식의 행위를 보이는 북한 정권의 능력에 대해 점점 더 큰 제약을 가하기 시작할 것이다.

질문 한국의 보수단체들이 선전 및 정보 전단을 풍선에 띄어 보낼 때마다 북한 정권은 매우 흥분하여 도에 지나친 선전을 한다. 귀하의 조사에서, 한국 보수단체들의 이와 같은 활동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된 것이 있는가? 북한에 정보와 전단을 많이 보내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우리는 이에 대해 조사한 것이 전혀 없으며, 최근의 사안에 대해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선전이나 정보 전단을 풍선에 띄워 보내는 활동은 극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1999년이나 2003년, 2005년에 북한을 떠났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활동을 접해보지 못했다. 이러한 것이 좋은 아이디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나는 대체로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풍선을 활용하는 단체들의 정치적 정교함에 매우 놀랐다. 그들은 분명히 북한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나는 조잡한 반(反)정권 선전물일 것으로 예상했었다. 우리는 이 전단지 중 하나를 복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블로그에 올려 놓았는데,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지난 60년간 한반도의 역사를 요약한 것이다. 나는 이 전단이 서로 다른 남북의 집단들이 그 동안 어떻게 행동해왔는지를 실제로 상당히 공정하게 보여

주고 있고, 특히 김씨 일가와 그 정권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알기로는, 북한 주민들을 놀라 까무러치게 만드는 것은 김정일의 사생활에 대한 것으로, 그의 부인이 여러 명이며 그의 자식들이 서로 다른 여자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팜플렛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그들은 가계보 같은 것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나는 북한 주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바로 이 사생활에 관한 정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북한 정권을 공격하는 정보보다는 아주 객관적인 정보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정보가 북한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끌 수 있을 것이며, 아마도 건설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한 주민들이 미국이나 한국 신문이 아닌, 예컨대 단순히 London Times나 Le Monde 또는 El Paris와 같은 신문들을 읽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냥 세계 여러 지역의 물가나 날씨를 아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유익할 것이다. 반정권 선전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북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매우 건설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왜 이러한 단체들의 일부 활동을 불편해 하는지 이해는 가지만, 나의 궁극적인 요지는 이러한 활동을 통제하기보다는 내버려두는 것이 국가손익면에서 더 낫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간단체들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통제하기보다는 자원에 맡기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는 민간단체들이 자신의 자원을 가지고 하는 활동인 것이다.

질문 미국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라는 대북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아주 간략히 이야기해 보겠다. Obama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는 취임연설을 통해서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몇 주가 채 되지 않아 나온 북한의 대답은 핵실험과 미사일실험이었다. 한편 Obama 대통령이 취임했었을 때 미국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당면한 상황이었고, 전임 대통령이 남기고 간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해결해야 했다. Obama 대통령이 북한에 손을 내밀었으나 북한은 그 손을 뿌리쳐버렸다. 여러분이 이러한 입장에 있었다면 북한과 협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려 하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다른 문제들로 관심을 돌렸을 것이다. 현재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 북한과 직접 대화하라는 구체적인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Kerry 상원의원은 Los Angeles Times에 북한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 기사를 썼다. 그렇다. 대화는 항상 좋은 것이다. 누군가와 대화해서 손해 볼 것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은 1995년 당시와 너무 비슷하다. 1994년 10월에 미국과 북한은 합의서(제네바합의를 말함)에 서명하였으며, 다음 달인 11월에는 야당인 공화당이 의회선거에서 승리하여 의회를 장악했다. 1996년 11월 대통령선거를 향해서 치달던 1995~1996년 기간에 공화당은 북한이슈를 Clinton 행정부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사용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공화당이 지난 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했고 Obama 대통령은 내년 재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Obama 대통령은 북한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거나 정치적 자산을 위태롭게 하기를 매우 꺼려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즉 인도적 지원 같은 단순한 일마저도, 공화당이 공격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의회 의원들은 미국이 북한에 식량원조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공격

을 하고 있다.

나는 기본적으로 남한의 정치상황과 미국의 정치상황, 그리고 북한의 권력승계 이슈로 인해 앞으로 수년간은 중대한 돌파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생각한다.

질문 귀하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북한의 부패가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난다. 귀하는 이러한 부패증가 추세와 북한 정권의 안정성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답변 부정부패는 일종의 안전밸브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경찰이나 지방 공무원들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뇌물을 받기 때문에 온전한 임금을 다 안 줘도 되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내놓는 정치적 아젠다와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할 대리인 및 공무원들의 지방적 이해관계가 서로 벌어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다.

북한에서 함경북도는 낙후된 지역이다. 이 지역의 경제는 매우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이곳의 지리적 위치와 비교적 좁은 두만강의 강폭으로 인해서 북쪽의 함경도에서는 탈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래서 중국뿐 아니라 남한에 오는 난민들의 상당수가 함경북도 출신이다. 이들이 다시 함경북도로 송금한 돈이 현재 그 지역의 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승인 없이 북한을 나오는 것은 불법이고, 남한으로 가는 것은 반역에 해당되므로 난민들의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한다. 내가 들은 일화에 의하면, 함경북도 공무원들은 한국으로 도망간 사람의 가족한테 가서 “당신 형제가 지금 한국에 있다고 들었고, 당신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알고 있다. 그 돈을 나와 나눈다면 눈 감아주겠다.”라고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경에서 감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함경북도로 송금하는 비용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송금한 돈의 50%는 현재 함경북도 공무원들이 걷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강제수용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이는, 중앙정부는 난민들의 가족들을 강제수용소에 보내려고 하지만, 지방 공무원들은 이러한 류의 부패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패는 이처럼 안전밸브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통제수단을 취약하게 만들어 중앙정부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파악한 것 중에 하나는, 많은 북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벌리는 부패의 손길을 뿌리치기 위해서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중앙집권화시키려 한다는 사실이다.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중앙집권화하면, 동시에 부패도 중앙집권화가 된다. 이를 위한 위원회들의 구성원을 보면,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 내부의 정치경제에 대한 지도를 보는 것과 같다. 어떤 단체와 개인이 영향력이 있는지, 또 어떤 단체가 중국투자자로부터 들어오는 돈을 걷어가게 될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질문 앞으로의 북한을 어떻게 보는가? 북한 사람들이 정보 및 시민사회기구들과 더 많은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에서 재스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가까운 미래에 한국이 통일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가? 아니면 통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답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당연히 다음세대 내에는 통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서 재스민혁명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본질로 인해, 재스민혁명이나 동독의 붕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

보다는 더 폭력적인 루마니아 혁명과 같을 가능성이 많다. 유혈사태와 거리의 총격전이 있을 것이다. 갑작스런 변화가 생긴다면 엘리트층 내에서의 싸움이 주요역할을 할 것이라 보고 있으며, 각종의 안보기관 및 군사기관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북한에서 일어날 결과로써 동독의 사례가 매우 좋다고 본다. 대규모의 폭력사태가 없었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며, 핵무기가 유출되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국사람이라면 동독의 경우처럼 되기를 매일 밤 기도할 것이다. 북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다면 실제로 유혈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본다. 물론 진짜 위험은 한 파벌 또는 그 이상의 파벌들이 한국이나 중국에 지원을 호소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 세력이 들어오면 정말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결국 통일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질문 난민들이 수용소에 있었을 때 학대를 목격했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듣고 싶어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다.

답변 우리가 매우 염려했던 것이 그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석 과정에서 단계적인 질문을 했다. 우리가 수감 경력자들에게, 수감 당시에 다른 수감자가 매맞는 것을 본적이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거의 100%였다. 내 추측에 한국에 있는 감옥이나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감옥에 가서, 수감자들에게 다른 수감자가 매맞는 것을 본적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세계 어느 감옥이든 가서 수감자가 매맞는 것을 본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북한 난민들에게 공개처형을 본적이 있냐고 물어보았다. 충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응답했지만 50% 정도로 훨씬 적은 수치였다.

우리는 이러한 류의 여러 가지 형태의 확대에 관한 질문을 한 후, 난민들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됐을 때 임신 중이었던 여성들에게 행한 강제낙태나 영아살해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중국에서 했던 조사에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수치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훨씬 낮은 6%였다. 남한에서 조사했을 때에는 직접 알고 있다고 말한 응답자가 7%였다. 그래서 확대를 단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두 조사가 그럴듯하게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두 조사에서 얻은 수치가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영아살해는 북한의 법률제도에서 불법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지금도 이러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가 현재 법령에 범죄라고 규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에도 그러하다는 것은 이전부터 계속되어온 행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의 법령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 중 하나이다. 이는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암시적으로 말해준다. 북한 법령을 보면 별것들이 다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귀금속을 파는 것이 불법이 되었다면 누군가가 귀금속을 팔았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바뀐 법령 중에 호기심을 자아내는 것 중 하나는, 북한에서 호텔과 식당에서 매춘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불법화하였고, 그 후 이것은 사형에 처할만한 중범죄로 크게 바뀌었고, 현재 북한에서는 매춘을 알선하게 되는 것도 사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것이 좋은 것일 수도 나쁜 것일 수도 있는데,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다.

부 록

《세계경제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1. Occasional Paper Series

11-01	After the Crisis: What Next in 2011 and 2012?	Allen Sinai
11-02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한국의 선택은	장 순 흥
00-01	한미관계: 현황 및 향후 전망	Stephen W. Bosworth
00-02	글로벌 뉴 이코노미: 도전과 한국의 활로	양 수 길
00-03	금융감독의 세계적 조류	이 용 근
00-04	성장하는 아시아와 침체 속의 일본	Kenneth S. Curtis
00-05	세계금융체제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Morris Goldstein
00-06	시애틀 이후의 WTO와 한·미 FTA 전망	Jeffrey Schott / 최인범
00-07	다자간 국제경제기구의 미래와 전망	Anne O. Krueger
00-08	남북한 관계: 현황과 전망	Marcus Noland
00-09	Knowledge 시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Andrew Fraser
00-10	미국 新행정부 및 의회의 대외·경제 정책방향	C. Fred Bergsten
01-01	2001년 미국, 일본경제와 아시아	Kenneth S. Curtis
01-02	부시행정부의 對韓경제정책과 한국의 대응	Marcus Noland
01-03	3C를 극복하자	Jeffrey D. Jones
01-04	하이테크와 비즈니스, 그리고 세계경제	John Naisbitt
01-05	한국과 IMF	Stanley Fischer
01-06	한국경제의 향후 10년	Dominic Barton
01-07	세계 달러본위제도와 동아시아 환율딜레마	Ronald McKinnon
01-08	新국제질서 속의 유럽과 한국	Pierre Jacquet
02-01	금융위기 再發, 어떻게 막나: 칠레의 경험을 중심으로	Carlos Massad
02-02	세계경제의 기회와 위협	Martin Wolf

02-03	미·일 경제현황과 한국의 대응	Marcus Noland
02-04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회복가능성과 위협	Allen Sinai
02-05	세계화: 혜택의 원동력	The Rt. Hon. Patricia Hewitt MP
02-06	9·11 테러사태 이후의 세계질서: 문명의 충돌인가?	Francis Fukuyama
02-07	아시아지역의 통화·금융 협력	Barry Eichengreen
02-08	세계경제, 회복되나?	Kenneth S. Curtis
02-09	미국 경제와 달러의 장래	Marcus Noland
02-10	도하라운드: 문제점과 전망	Jagdish Bhagwati
02-11	2003 한국경제와 세계경제 전망	Paul F. Gruenwald
02-12	미국경제 현황과 세계경제의 앞날	John B. Taylor
02-13	9·11사태와 미국의 한반도 정책	Thomas C. Hubbard
02-14	미국 경제, 달러 및 대외통상정책 방향	C. Fred Bergsten
02-15	미국의 IT산업 관련 정책과 한국	Peter F. Cowhey
03-01	이라크전 이후의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Allen Sinai
03-02	OECD가 본 한국경제	Donald Johnston
03-03	아·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새 역할	Charles Morrison
03-04	세계경제 전망과 부시행정부의 경기부양책	Phil Gramm
03-05	침체된 독일·유럽 경제가 주는 정책적 교훈과 시	Hans Tietmeyer
03-06	동아시아 금융협력과 한국	Eisuke Sakakibara
04-01	2004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전망	Allen Sinai
04-02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	Marcus Noland
04-03	미국 대통령선거와 韓·美·日관계	Hugh T. Potrick / Gerald Curtis
04-04	중국경제의 부상과 동북아 지역경제	Dominic Barton
05-01	대통령선거 이후의 미국 통상정책, 어떻게 되나?	Peter F. Cowhey
05-02	아시아 경제·무역환경, 어떻게 전개되나	Dominic Barton
05-03	2기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과 세계경제 및 시장 전망	Allen Sinai
05-04	일본의 시각에서 본 한국경제의 활로	Fukagawa Yukiko

05-05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보는 한국	Thomas Byrne
05-06	세계 속의 한국경제: 역할과 전망	Anne O. Krueger
05-07	중국과 인도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Wendy Dobson
05-08	동아시아와 아·태지역 경제통합	Robert Scollay
06-01	고유가와 세계경제의 앞날	Philip K. Verleger
06-02	2006년 미국경제/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전망	Allen Sinai
06-03	한-미 FTA : 지속성장의 활로	Alexander Vershbow
06-04	일본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일 FTA	Oshima Shotaro
06-05	일본 경제회생과 한국경제	Fukagawa Yukiko
06-06	세계 MSA시장 현황과 전망 : 우리의 대응	Robert F. Bruner
07-01	한-미관계 : 새로운 동반자 시대를 지향하며	Edwin J. Feulner
07-02	통일 이후 독일 경제침체의 교훈	Juergen B. Donges
07-03	2007년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지각변동	Allen Sinai
07-04	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ngel Gurria
07-05	동아시아 FTA 가능한가? : 중국의 시각	Zhang Yunling
07-06	구조적 변화 맞고 있는 세계석유시장과 한국	Fereidun Fesharaki
07-07	변모하는 세계경제와 한국	Anne O. Krueger
07-08	되살아나는 일본경제 : 전망과 과제	Fukagawa Yukiko
07-09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와 글로벌 기업 전략	Ben Verwaayen
07-10	한-미 FTA : 미국의 시각	Jeffrey Schott
07-11	한-미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Barry Eichengreen
08-01	국가 미래를 위한 한국의 세계화 전략	Anne O. Krueger
08-02	2008년 미국경제와 세계금융시장 동향	Allen Sinai
08-03	유럽의 경제침체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Guy Sorman
08-04	차기 미국 대통령이 풀어야 할 세계적 도전	James A. Baker III
08-05	일본 증권시장의 현재와 전망	Astushi Saito
08-06	대선 이후 미국의 정치·경제, 어떻게 전개되나?	Phil Gramm
08-07	세계 및 아시아 경제·금융 전망	Charles Dallara

08-08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 어떻게 하나?	Guy Sorman
09-01	2009년 한국 경제와 세계 및 아시아 경제 전망	Subir Lall
09-02	혼란과 전환기의 경쟁력 강화: 과제와 전망	Deborah Wince-Smith
09-03	위기 속의 미국 및 세계 경제와 금융: 전망과 정책대응	Allen Sinai
09-04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	Jeffrey Schott
09-05	하강하는 세계경제와 케인지언 정책처방의 실효성	Justin Yifu Lin
10-01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 변화하는 EU: 한국의 기회는?	Jean-Pierre Lehmann
10-02	위기 이후 미국 및 세계경제 전망, 그리고 유산과 정책과제	Allen Sinai
11-01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2011년 및 2012년 전망	Allen Sinai
11-02	원자력발전의 안정성과 경제성: 한국의 선택은?	장 순 흥

2. 세계경제지평

94-01	유목적 세계의 도전	Jacques Attali
94-02	세계주의와 지역주의 混在	이 영 선
94-03	기회와 위협으로서의 中國	김 완 순
94-04	21세기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Paul Kennedy
94-05	화폐의 종말/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홍기택 / 주한광
94-06	UR이후 아·태 경제협력의 과제	유 재 원
94-07	환경과 무역	나성린 / 김승진
94-08	円高에 따른 일본의 산업구조조정과 한국경제의 대응	이 중 윤
94-09	세계경제환경 변화와 우리의 선택	사공 일
94-10	개방화에 따른 기업정책의 방향	김 중 석
95-01	한국경제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 도전과 기회	사공 일
95-02	기업의 세계화와 경쟁규범	김 완 순
95-03	무엇이 세계화인가	김 병 주

95-04	한국과 미국: 2000년의 세계경제	James Laney
95-05	세계경제는 좌초할 것인가	김 적 교
95-06	엔화강세 지속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박 진 근
95-07	세계화와 한국경제: 호황인가 거품인가	구 본 호
95-08	확산되는 특혜무역협정과 정책과제	남 중 현
95-09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홍 원 탁
95-10	일본산업의 네트워크 구조와 그 효율성	이 중 윤
95-11	국제경쟁력의 갈등	이 재 응
95-12	해방후 우리 경제 반세기의 회고와 전망	김 광 석
96-01	국내 선물시장의 구상과 전망	이 선
96-02	중소기업시대 열릴 것인가	유 동 길
96-03	단체교섭제도 有感	배 무 기
96-04	세계화와 기업의 변신	지 청
96-05	우리나라 금융시장개방의 추진방향	박 영 철
96-06	다변주의 對 지역주의, 兩立은 가능한가?	김 세 원
96-07	派生金融商品의 위험과 효용	민 상 기
96-08	최근 경제위기감의 실체와 대응방향	김 광 석
96-09	경제발전, 제도개혁, 경쟁질서의 확립	이 성 섭
96-10	轉機를 맞이한 정부의 기능	김 병 주
96-11	WTO의 새로운 협상의제	김 완 순
97-01	노동법개정 難局의 해법: 교섭창구 단일화를 前提한 複數勞組 허용	김 수 곤
97-02	감속성장, 왜 바람직한가	김 적 교
97-03	韓寶사태의 敎訓	이 재 응
97-04	세계화시대의 경제운영	남 덕 우
97-05	기업성장의 虛實: 韓寶事態에서 얻는 敎訓	지 청
97-06	북한의 식량난과 집단농장체제	문 팔 용
97-07	한국의 금융개혁	윤 계 섭

97-08	高齡化 社會의 도래와 財政危機	박 종 기
97-09	外換危機의 일반모형을 감안한 우리의 대응방향	박 진 근
97-10	벤처기업시대를 열어가려면	유 동 길
98-01	한국의 經濟奇蹟은 끝날 것인가?	남 중 현
98-02	파라다임의 대전환없이는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	송 대 희
98-03	기업구조조정과 바람직한 은행-기업관계	남 상 우
98-04	새로운 기업지배구조의 모색과 사외이사의 역할	이 영 기
98-05	고투자-고저축 고리의 단절을 위한 제언	이 영 탁
99-01	연금개혁의 전망과 과제	박 종 기
99-02	지하철과업과 다시 보는 노조전임자 문제	김 수 곤
99-03	금융구조조정과 중소기업금융	박 준 경
99-04	21세기를 향한 환경정책과제	김 종 기
99-05	소득분배 문제의 실상과 대응방향	김 광 석
00-01	2000년 경제전망 및 향후 과제	김 준 경
00-02	세계금융체제에 관한 논의, 어떻게 되고 있나	사공 일
00-03	아시아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미래	사공 일
00-04	高비용 低능률 구조의 부활	이 중 윤
00-05	아시아 경제회복, 지속될 것인가?	사공 일
00-06	국제경제환경과 한국경제	조 윤 제
00-07	기업경영 감시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이 재 웅
00-08	미국의 구조조정 경험과 교훈	이 영 세
01-01	한국산업의 경쟁력 위기와 향후 진로	김 도 훈
01-02	주 5일 근무제 도입 신중해야	박 영 범

3. 연구보고서 (세계경제 시리즈)

94-01	UR 이후 아·태경제협력의 과제와 한국의 선택	유 재 원
94-02	환경-무역관계가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	김승진 / 나성린
94-03	円高에 따른 일본의 산업구조조정과 한국경제의 대응	이 중 윤

94-04	개방화에 따른 기업정책의 방향	김 종 석
95-01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정책대응	주한광 / 김승진
95-02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 기업: 한·일 기업의 수영가능성 비교	이 재 규
95-03	WTO 체제와 우리의 대응	김 지 흥
96-01	국내선물시장에 대한 구상과 전망	이 선
96-02	일본산업의 네트워크구조와 그 효율성	이 중 윤
97-01	루마니아의 경제현황과 주요개혁과제	김광석 / 김병주 / 고일동
98-01	우리경제의 成長要因과 成長潛在力 展望	김 광 석
98-02	한국과 ASEAN諸國間 무역구조의 변화추이와 대응방향	김 승 진
98-03	The Global Trading System: Challenges Ahead	Wan-Soon Kim / Nakgyoon Choi
98-04	정보화의 세계적 추세와 우리의 대응방안	박 중 국
00-01	Financial Crisis and Industry Policy in Korea	Young Sae Lee / Young Seung Jung
01-01	한국에서의 기술이전과 정보의 역할	이 영 세
01-02	우리나라의 산업·무역정책 전개과정	김 광 석

4. 초청강연자료 (특별강연 시리즈)

94-01	21세기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Paul Kennedy
94-02	미국과 일본간의 기술경쟁과 한국에 미친 영향	Ronald Morse
94-03	일본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Toyoo Gyohten
94-04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현황과 전망	Allen Sinai
94-05	국제환율제도 이대로 좋은가	John Williamson
94-06	The Promises of the WTO for the Trading Community	Arther Dunkel
95-01	멕시코 폐소화 위기와 세계금융시장 동향	Charles Dallara
95-02	세계경제 동향과 미국경제 전망	Allen Sinai

95-03	새로운 게임,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전략	Lester Thurow
95-04	미국-북한관계 전망	Robert Scalapino
95-05	미국의 동아시아정책과 한반도	James Baker III
95-06	미·일 무역마찰과 한국	Anne Krueger
95-07	동북아경제권 개발 전망-일본의 시각	Hisao Kanamori
96-01	Prospects of Global Economy in 1996	Allen Sinai
96-02	유럽연합(EU)의 앞날과 세계경제	Örström Möller
96-03	세계경제와 OECD의 역할	Donald Johnston
96-04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정치적 배경과 영향	Francis Fukuyama
96-05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새 역할	A.W. Clausen
97-01	다국적기업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Wendy Dobson
97-02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정책	William J. Perry
97-03	뉴질랜드의 공공부문 개혁	Donald K. Hunn
98-01	범 세계적 기업과 다자간 투자협정	Edward M. Graham
98-02	변화속의 안정: 새로운 한·미 관계의 모색	W. Anthony Lake
98-03	한국: 동북아의 새로운 협력중심으로	Donald P. Gregg
98-04	경제적 측면에서 본 독일 통일의 교훈	Juergen B. Donges
98-05	세계화와 종족화-20세기 말의 딜레마	Guy Sorman
99-01	북한의 정치·경제상황과 동북아 안보	Marcus Noland
99-02	엔-달러 환율과 국제금융시장	Kenneth S. Courtis
99-03	한국과 아시아 경제: 전망과 정책대응	Donald Johnston / Hubert Neiss
99-04	미국과 일본 경제의 비교 평가	Hugh T. Patrick
99-05	세계경제: 도전과 전망	Rudiger Dornbusch
00-01	금융세계화, 어떻게 대처하나	James P. Rooney
00-02	2000년 국제금융 및 신흥시장 전망	Charles Dallara / Robert Hormats

5. 전문가 진단

· 한국 FTA 정책의 虛와 實

남중현

· A Foreign Businessman's Observations on the Korean Economy & Other Things

William Oberlin

· 세계속의 한국경제 : 과제와 전망

사공 일 編

6. 기타 보고서

· The Global Economy and Korea

사공 일 編

· The Multilateral Trading and Financial System

사공 일 編

· Major Issues for the Global Trade and Financial System

사공 일 編

· 탈냉전시대 韓美 정치 · 경제협력관계

사공 일 / C. Fred Bergsten 編

· 새로운 韓美 협력체제의 모색

사공 일 / C. Fred Bergsten 編

· 세계화시대의 英美관계

사공 일 / C. Fred Bergsten 編

· 한반도 통일 및 韓美 관계의 현황과 과제

사공 일 編

·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un(I)

세계경제연구원 編

·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un(II)

세계경제연구원 編

·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un(III)

세계경제연구원 編

·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un(IV)

세계경제연구원 編

· 세계반도체산업의 발전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세계경제연구원 編

· 한국의 금융개혁

세계경제연구원 編

· Policy Priorities for the Unified Korean Economy

사공 일 / 김광석 編

· The Fifty Year of the GATT/WTO: Past Performance and Future Challenges

사공 일 / 김광석 編

·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책

사공 일 / 구영훈 編

· 아시아 금융위기와 한 · 미관계

세계경제연구원 編

· For Better Tomorrow: Asia-Europe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ASEM Vision Group

- 제6차 한·미 21세기 위원회 보고서 세계경제연구원 編
- 동북아시아포럼 2000 세계경제연구원 編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rging Market Perspectives
사공 일 / 왕운중
- 세계 자유무역 의제를 위한 여건조성 세계경제연구원 編
- Rebuild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PEG서울보고서)
Emerging Markets Encinent Persons Group 編
-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응(I) 세계경제연구원 編
- 새로운 세계질서: 기회와 도전 -
-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응(II) 세계경제연구원 編
- 세계경제 및 주요국 경제의 앞날 -
-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응(III) 세계경제연구원 編
- 한국 경제의 진로 -
- 세계경제연구원 개원 10주년 국제회의 세계경제연구원 編
- 세계환율체제 개편과 동아시아 경제 John Williamson
- 아시아 화폐단일화, 가능한가? Robert Mundell
- 창업활성화, 어떻게 하나 세계경제연구원 編
- 세계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Berry Eichengreen
- 미국의 힘은 얼마나 강하며, 중국의 부상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Paul Kennedy / Bernard K. Gordon
- 2006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
Richard N. Cooper / George Scalise
- 아시아 경제통합과 세계 속의 한국경제
Eisuke Sakakibara / Charles Dallara
- 2007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 Guy Sorman / Tarun Das
- Globalization and Korean Financial Sector (세계화 시대의 한국 금융산업)
세계경제연구원 編
- 2007 IGE/Prudential International Finance Lecture

David Hale / Jerald Schiff

- 2008 IGE/Prudential International Finance Lecture

Robert C. Pozen / Jeffrey R. Shafer

- Lessons from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Its Implications for the World and Korea

세계경제연구원 編

- 2009 IGE/Prudential International Finance Lecture

Danny Leipziger / Anne O. Krueger

- 2010 IGE/Prudential International Finance Lecture

Mark Mobius / Dominique Strauss-Kahn

- 2009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

Guy Sorman / Jeffrey J. Schott

- G-20 Reform Initiative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Financial Regulation

세계경제연구원 編

- 2010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

Yukiko Fukagawa / Danny Leipziger

- 2011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

Danny Leipziger / Marcus Noland

**2011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

2011년 9월 19일 인쇄

2011년 9월 22일 발행

발행인 남종현

발행 세계경제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호

인쇄 오롬시스템(주) 2273-7011

ISBN 978-89-86828-71-9

정가 10,000원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 후원회원의 종류
 - 법인회원
 - 개인회원
- 법인회원에 대한 서비스
 - 연구원 주최 행사에 우선 초청
 - 연구원 주최 행사에 5인까지 무료 참가 가능
 -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 무료 제공
 - 법인 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개인회원에 대한 서비스
 - 연구원 주최 행사에 초청
 - 행사 참가비 할인
 - 연구원이 발간하는 일부 간행물 무료 제공
- 후원회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공제 가능
- 회원 가입 문의
 - 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
세계경제연구원
 - 연락처: 551-3334~7(전화) 551-3339(팩스)
 - E-mail: igenet@igenet.com
 - <http://www.igenet.com>

5년연속
세계판매 1위
★★★★★

삼성전자 SAMSUNG



당 당신의 스마트TV니까

대화면으로 더욱 실감나는
스카이프 무료영상통화



대화면 무료영상통화 | 실시간 인터넷검색과 스마트팁 | 끊임없이 업데이트 되는 3D콘텐츠와 스마트어플 스마트TV의 [하늘과 땅차이] Samsung SMART TV

※5년연속 세계판매 1위 : 2006년 ~ 2010년 디스플레이서치 세계판매 기준

GE 세계경제연구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호
TEL : (02) 551-3334/7, FAX : (02) 551-3339
E-mail : igenet@igenet.com
(Website)http://www.igenet.com



정가 10,000원